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5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5. 12

대한민국정부

목 차

Ⅰ.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1. 목표 및 방향 ····· 3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7
3. 2005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5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 19

1. 협동조합개혁 ····· 21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6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6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57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9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74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 8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90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01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09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17
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137

Ⅳ.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141

1. 쌀산업 대책 추진 ····· 143
2. 채소·원예산업 ····· 149
3. 축 산 업 ····· 154
4. 임　　업 ····· 170
5. 수 산 업 ····· 197

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 205

1. 기초생활환경 개선 ····· 207
2. 교육여건 개선 ····· 218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 220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221

Ⅰ.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 3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7

3. 2005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5

Ⅰ.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쌀 관세화 관련협상·DDA협상·FTA 확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안전·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농산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 여가증가에 따라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첫째, 쌀산업의 체질강화

둘째, 전문 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셋째,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넷째,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다섯째,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섯째, WTO/FTA 농업협상 대응

을 6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05년도 농정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6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2005년도에는

첫째, 고품질 쌀 생산·유통효율화,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 공공비축제 도입 등 쌀 산업의 체질강화와 쌀농가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 농지은행제도입, 산지유통활성화, 식품산업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등 농지제도 개선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내실임대 추진하고 농촌협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농업인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을 감안, '04년부터 시작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융자 방향전환과 더불어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04.4) 및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방안」('05.2)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형성·집행단계부터 농업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농림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05년에는 '04년도 농림사업 135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송아지생산기지 조성 등 14개 사업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 가축계열화사업 등 2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농축산경영자금 등 6개 사업은 '06년도 예산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정부지원이 부채로 연결되는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경영·기술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조기에 진단하고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임업분야에서는 반세기에 걸쳐 추진해온 산림계획에 의거 성공적으로 녹화된 산림을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숲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격에 걸맞은 국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녹화된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국가계획인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임정·기술임정·참여임정을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는 '숲다운 숲'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며 산촌진흥에 노력하는 등 사람과 숲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도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자율관리어업체제 확립 및 어업제도개편 등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어장축소와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율관리어업을 모든 어촌으로 확산하여 어업인 의식개혁과 "새어촌 운동"으로의 발전을 지원하며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및 어초시설 개발·설치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율관리체제에 적합하도록 어업제도의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우선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토록 하고 업종별 허가정수의 정비 및 유사업종의 통합과 조업구역·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

도 정착으로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둘째,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업종과 어업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2005년까지 근해어선 1,942척과 연안어선 1,835척을 감척하여 적정 어획량을 확보하고 양식수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강화하였다.

셋째, EEZ체제에 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범 정부차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병행, 어업인 지원을 통하여 불법어업 근원을 제거해 나갔으며, '소형기선저인망특별정리법'에 의거 2,025척의 어선을 신청받아 정리 추진중에 있다.

넷째, 지속적인 해양오염 퇴적물 준설과 침적폐기물 수거·처리로 깨끗한 바다조성에 주력하며, 어장정화 규모의 확대와 양식수산물 질병관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배합사료 공급율을 확대하여 자원남획과 어장오염을 방지하고 적조의 신속대응 등을 통하여 풍요로운 바다, 건강한 어업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섯째, 어촌·어항·어족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선 소규모 어촌·어항을 레저·휴식·관광의 다기능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고, 바다목장, 마을어장 등을 체험·생태형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 도입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수산물의 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시장 기능에 따른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인공위성 영상 판독을 통한 강도 높은 양식어장 정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할 수 있는 양식산업 관측제 및 유통협약제를 도입하고, 종합판매장 등 유통기반시설을 지속 확충, 선어회 소비 촉진을 통해 수산물 식문화 개선, 전자상거래 실시 등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일곱째, 수산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인력·장비보강으로

통관검사 및 원산지표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식약청·시도와 합동점검체계 구축으로 생산·유통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한·중 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및 '한·중 수출입활수생동물의위생관리에관한약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중국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에 증진하였다. 그러나 국내산 살아있는 송어, 향어, 자라에서 일부 말라카이트그린(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와 양식업계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여덟째, 부실심화로 정상적 기능수행이 곤란한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지원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어업인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내외 어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수산세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아홉째, WTO-DDA의 수산보조금 및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철폐에 대한 협상에 대비하여, '04년에 마련한 "수산·어촌종합대책"을 추진하고 '05년부터 5개년동안에 시행할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수산업을 시장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04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첫해로서 '04년 투융자규모를 8조 5,967억원(국고예산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8조 2,901억원으로 계획대비 일부 미달(96.4%) 집행되었다.

< 2004년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계획(예산)(A)	실 적(B)	B-A	대비(B/A)
국 고	**85,967**	**82,901**	**△3,066**	**96.4**
(보 조)	(60,399)	(59,036)	(△1,363)	(97.7)
(융 자)	(25,568)	(23,865)	(△1,703)	(93.3)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사유는 ⅰ)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감소 ⅱ)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일부 직불성사업의 지급사유 미발생 ⅲ)FTA기금사업의 경우는 사업준비기간 소요 및 투융자 여건 미성숙에 따라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사업이 지연 ⅳ)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은 소요재원 과다 예측으로 상당액의 불용액 발생 ⅴ)기타 많은 개별사업에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19조 투융자 사업은 3년 단위로 종합평가(중간점검)를 실시하여 연도별 사업별 투융자 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8조 2,901억원 중 영농규모화 촉진, 전문농업인 육성 등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에 2조 4,085억원(29.1%),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농외소득 증대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 1조 8,072억원(21.8%),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지역 개발 등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에 8,491억원(10.2%), 농산물 유통혁신 분야에 6,048억원(7.3%),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 5,825억원(7.0%), 농업기계화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에 2조 380억원(24.6%)이 집행되었다.

< 2004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분야별 내역 >

(단위 : 억원, %)

분야(기능)별	계획(예산)(A)	실적(B)	대비(B/A)	비 중
합 계	**85,967**	**82,901**	**96.4**	**100.0**
□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24,127**	**24,085**	**99.8**	**29.1**
○영농규모화 촉진	3,233	3,233	100.0	
○친환경농업 지원	931	882	94.7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 제고	1,026	834	81.3	
○전문농업인 육성	1,051	1,046	99.9	
○농림업 기술개발 보급	3,363	3,287	97.7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3,838	3,469	90.4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10,289	10,934	106.3	
○지역농업 육성지원	400	400	100.0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9,998**	**18,072**	**90.4**	**21.8**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19,642	17,716	90.2	
○농외소득 증대	356	356	100.0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8,905**	**8,491**	**95.4**	**10.2**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1,432	1,187	82.9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1,073	909	84.7	
○농촌지역 개발	6,400	6,395	99.9	
□ 농산물 유통혁신	**6,536**	**6,048**	**92.5**	**7.3**
□ 산림자원 육성	**6,010**	**5,825**	**96.9**	**7.0**
□ 농업생산기반 정비	**20,391**	**20,380**	**99.9**	**24.6**
○농업생산기반 정비	18,331	18,331	100.0	
○농업기계화 지원	2,060	2,049	99.5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92~'98),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99~'04),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계획('04~'13)에 따라 '92~'04년간 국고기준 약 77조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99-'04 농림어업 연평균 GDP 성장율은 1.1%P 증가하였고, 농가소득 및 농가자산은 '98년도 대비 각각 41.5%, 26.7%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도 소득증가율 이상 증가하였다.

- 농림어업 부가가치 : ('91) 214,530억원 → ('98) 233,554(108.9%) → ('04) 248,493(106.4%)
  · 농림업 부가가치성장율 : ('92~'98) 연평균 0.4% → ('99~'04) 연평균 1.1%
  · 광공업 부가가치성장율 : ('92~'98) 연평균 5.2% → ('99~'04) 연평균 10.8%

- 농가소득 : ('91) 13,105천원 → ('98) 20,494(156.4%) → ('04) 29,001(141.5%)

- 농가자산현황 : ('91) 99,189천원 → ('98) 192,334(193.9%) → ('04) 243,665(126.7%)

- 농가부채현황 : ('91) 5,192천원 → ('98) 17,011(327.6%) → ('04) 26,892(158.2%)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은 대폭 진전되었다.

- 경지정리면적 : ('98) 678천ha → ('01) 710 → ('04) 721 (106.3%)
  (경지정리율) (59) (62) (65%) (6%P증)

- 배수개선 : ('98) 84천ha → ('01) 111 → ('04) 128 (152.4%)
  (배수개선율) (45) (59) (68%) (23%P증)

- 밭기반정비 : ('98) 30천ha → ('01) 48 → ('04) 64 (213%)
  (밭기반정비율) (27) (43) (57) (30%P증)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98) 5,608km → ('01) 11,128 → ('04) 15,078 (269%)
  (확포장비율) (16) (26) (43) (27%P증)

○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가 진전되었다.

- 경지 3ha이상 농가 : ('98) 66천호 → ('01) 75 → ('04) 82 (124%)
  ('04총농가 : 1,240천호) (4.7) (5.5) (6.6%) (1.9P%증)

- 젖소 50두이상 농가 : ('98) 2,976호 → ('01) 4,270 → ('04) 4,501 (151%)
  ('04총농가 : 9,612호) (19.0) (33.3) (46.8%) (27.8P%증)

- 양돈 1천두이상 농가 : ('98) 1,932호 → ('01) 2,733 → ('04) 2,868 (148%)
  ('04총농가 : 13,268호) (7.2) (14.0) (21.6%) (14.4P%증)

- 양계 3만수이상 농가 : ('98) 862호 → ('01) 1,161 → ('04) 1,349 (156%)
  ('04총농가 : 131,288호) (0.5) (0.6) (1.0%) (0.5P%증)

○ 농업기반 확충 및 기계화·규모화 확대로 노동·토지생산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자본생산성은 농림어업부가가치가 줄어 당초보다 감소하였다.

- 노동생산성 : ('98) 9,897원/시간 → ('01) 12,141 → ('04) 12,210 (123%)

- 토지생산성 : ('98) 880천원/10a → ('01) 1,073 → ('04) 1,138 (129%)

- 자본생산성(부가가치/자본액) : ('98) 0.42 → ('01) 0.47 → ('04) 0.38(90%)

- 농업기계화율(논, 벼) : ('98) 96.8% → ('01) 98.7 → ('04) 99.1(2.3%P증)

- 농업기계화율(밭, 주요작물) : ('98) 41.8% → ('01) 47.0 → ('04) 47.2 (5.4%P증)

○ 품질인증 확대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이 확대되었다.

-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 ('98) 203천톤 → ('01) 294 → ('04) 647 (319%)
- 원산지표시이행률 : ('98) 92.5% → ('01) 95.9 → ('03) 96.1 (3.4%P증)
- 쇠고기(한우) 1등급이상 출현률 : ('98) 15.4% → ('01) 29.9 → ('04) 35.9(20.5%P증)
- 돼지고기 A등급 출현률 : ('98) 24.8% → ('01) 37.2 → ('04) 38.1(13.3%P증)

○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규격화·포장화·직거래화가 촉진되어 농산물 산지유통구조가 선진화되었다.

- 산지유통센터 : ('98까지) 134개소 → ('01) 196 → ('04) 213 (159%)
- 표준규격출하율 : ('98) 26% → ('01) 46.2 → ('04) 50.4 (24.4%P증)
- 농산물포장화율 : ('98) 75.1% → ('01) 88.5 → ('04) 85.4 (10.3%P증)

○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 유통구조가 확립되었다.

- 공영도매시장 : ('98) 18개소 → ('01) 29 → ('04) 32 (178%)
- 농산물공판장(국고지원) : ('98) 24개소 → ('01) 35 → ('04) 34 (142%)
- 종합유통센터 : ('98) 3개소 → ('01) 12 → ('04) 13 (433%)
- 미곡종합처리장 : ('98) 301개소 → ('01) 328 → ('04) 328 (109%)
- RPC 시장점유율 : ('98) 24.4% → ('01) 27 → ('04) 52 (27.6%P증)

○ 김치, 화훼, 과일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이 증대되었다.

- 화 훼 : ('98) 12백만불 → ('01) 32 → ('04) 49 (408%)

- 과　실 : ('98) 39백만불 → ('01) 56 → ('04) 86 (221%)

- 채　소 : ('98) 59백만불 → ('01) 121 → ('04) 127 (215%)

- 김　치 : ('98) 44백만불 → ('01) 69 → ('04) 103 (234%)

- 닭고기 : ('98) 1,605천불 → ('01) 3,106 → ('03) 3,761→ ('04) 2,335 (145%)

○ 농촌 의료·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

- 농촌지역 민간병원 부족병상 증설 등 지원
  · ('98) 428개소 → ('99) 489 → ('01) 541 → ('04까지) 676 (158%)

- 농업인 연금지원 : ('98) 616 → ('01) 709 → ('04) 749억원 (122%)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 ('98까지) 80천명, 793억원, ('04까지) 201천명, 2,642억원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실적
  · ('98) 33 → ('99) 38 → ('01) 46 → ('04까지) 71개소 (215%)

-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실적
  · ('98) 7,748 → ('99) 8,999 → ('01) 9,460 → ('04) 10,442명 (135%)

○ 농어촌 생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다.

- 농어촌 주택개량('04까지) : 380,203동, 39,780억원 지원(융자)

- 오지·도서공용버스구입지원('04까지) : 2,218대, 400억원 지원

- 농어촌마을정비(면개발) : ('98까지) 286개면 → ('04까지) 770 (269%)
  · 문화마을조성 : ('98까지) 104개소 → ('04까지) 199 (191%)

- 농촌 인터넷이용률 : ('98) 0.6 → ('01) 8.3 → ('04) 13.4% (12.8%P증)

나. 2004년도 임업 투·융자 지원

2004년도 임업 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03년도 6,703억원보다 443억원(6.6%) 증가한 7,146억원이다.

기능별로 보면 조림, 숲가꾸기, 묘목생산 등 지속가능한 산림의 육성에 1,885억원을 투자하였고, 기계화 추진, 임도 확충, 유통체계 구축 등 임업생산기반 확충에 2,139억원,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방지에 1,437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박물관 등 산림휴양·문화공간확대 및 산촌개발에 574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융자 부문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투·융자 부문별 내역 >

(억원)

구 분	'03예산	'04예산	증 감	%
합 계	**6,703**	**7,146**	**443**	**6.6**
○ 지속가능한 산림의 육성	1,749	1,885	136	7.8
○ 임업생산기반확충	2,280	2,139	△141	△6.2
○ 산림재해방지	1,302	1,437	135	10.4
○ 휴양·문화, 산촌	631	574	△57	△8.9
○ 녹색공간조성	109	192	83	76.7
○ R&D, 국유재산관리 등	632	919	287	45.4

투·융자사업의 향후 지원방향은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확대 및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숲 조성,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 대형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방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및 생활권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추진실적 및 평가

2004년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8,595억원이며, 2003년에 비해서 230억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경영개선자금의 대폭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수산부문의 예산중 자원조성, 수협경영개선, 어업질서유지, 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감천항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로 보면 영어자금, 수협경영개선, 어항어촌개발 등 어업인 경영지원 및 어업기반조성 5,941억원(69.1%), 자원조성, 기르는어업 육성, 어업구조조정, 어업질서 등 자원관리형어업 육성 및 구조조정 2,019억원(23.5%),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635억원(7.4%) 등에 집행되었다.

3. 2005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가. 2005년 농림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5년도 농림예산은 Top-down 제도 시행에 따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직불제 확충,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복지 및 지역개발과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체질개선 등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비 중심으로 배분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수급안정, 채무상환 예산 등은 축소 편성하였다.

첫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확보를 위해 직접지불 예산을 확대하고 부채대책 등 부담경감을 적극 추진하였다. 쌀협상에 따른 쌀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경관협약체결을 통해 농촌경관자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농가의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출연금 300억을 반영하였다.

둘째,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으며, 2ha미만 영세 농어가의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과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인원과 단가 확대 등을 통해 복지기반을 확충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투자촉진을 위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확대 반영하고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확대하였다.

셋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을 신규 도입하였고, 농산물 유통의 내실화를 위해 유통시설 위주에서 물류표준화 및 유통 S/W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FTA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넷째, 양곡수매와 생산조정 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게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다섯째, 창업농, 쌀 전업농 등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BT와 IT를 접목한 첨단농업기술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방단위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하였다.

여섯째, 생산기반조성부문은 계속지구 마무리를 위한 필요소요를 반영하고 신규착수를 최소화하되, 안전관리・재해예방 및 투자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2005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9조 8,414억원으로 2004년 보다 4.7%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

(단위 : 억원)

구 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B-A)	%
일반지출	Ⅰ. 주요사업비	73,441	81,282	7,841	10.7
	1. 생산기반조성	15,714	15,073	△641	△4.1
	2. 생산및유통개선	5,313	4,992	△321	△6.0
	3.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5,783	6,415	632	10.9
	4.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22,509	30,580	8,071	35.9
	5. 양곡수급안정	14,705	14,412	△293	△2.0
	6. 산림	7,134	7,713	579	8.1
	7. 채무상환	2,283	2,097	△186	△8.1
	Ⅱ. 기본경비	3,948	4,177	229	5.8
	1. 인건비	3,185	3,368	183	5.7
	2. 기본사업비	763	809	46	6.0
	일반지출계	77,389	85,459	8,070	10.4
기금전출금		16,568	12,955	△3,613	△21.8
순계		93,957	98,414	4,457	4.7

나. 2005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5년도 수산분야 예산은 WTO/DDA 협상타결에 대비한 사전 국내대책의 착실한 추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첫째, 수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어항건설은 완공위주로 적정 소요,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수협중앙회의 유통 및 지도부문 경영개선과 전산시스템 시설 연차소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소형기선망 정리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에 확대 지원하였고,

둘째, 감천항가공단지조성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 감천항도매시장, 자갈치시장 지원사업 등은 연차소요를 반영하고 수입수산물의 위생안전과 수산물 수출지원, 수산물의 수요개발 예산 등은 증액 반영하였으며,

셋째, 어업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영어자금 및 원양어업경영자금의 금리인하와 어가부채경감특별대책 등으로 인한 이차보전 필수소요를 반영하고, 양식어장의 환경악화와 자원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배합사료직불제, 어업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연안어선의 감척 등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
계		8,599	8,642	43	0.5
분야별	◆ 생산기반조성	5,362	5,199	△163	△3.0
	○ 어촌어항건설	2,005	2,115	110	5.5
	○ 수협경영지원	320	260	△60	△18.8
	○ 어업지도・단속	426	446	20	4.7
	○ 정책자금지원	1,391	1,329	△62	△4.5
	○ 수산자원관리	899	802	△97	△10.8
	○ 자율관리사업 등	321	247	△74	△23.1
	◆ 유통개선	588	362	△226	△38.4
	○ 유통시설지원	534	276	△258	△48.3
	○ 위생안전, 수출지원 등	54	86	32	59.3
	◆ 기술개발・인력양성	315	360	45	14.3
	○ 수산기술개발	261	288	27	10.5
	○ 기술관리	50	68	18	36.0
	○ 어업인교육	4	4	-	-
	◆ 부담경감・소득보전	2,334	2,721	387	16.9
	○ 어업인정책보험지원	219	209	△10	△4.6
	○ 어업구조조정	314	345	31	9.9
	○ 이차보전	869	1,113	244	28.1
	○ 어촌개발	306	324	18	5.9
	○ 친환경사료직불제	50	100	50	100.0
	○ 부실조합경영개선	576	630	54	9.4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개혁 ····· 21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6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6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개혁

가. 농업협동조합

(1)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과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농협의 사업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붕괴되고 시장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쟁시장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 이후 각국 정부는 농업보호정책 감축과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은 양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 추세는 단순 물량 위주의 사업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최근 선진국 협동조합들은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혁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 차원에서 시장지향적 사업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직구조를 사업전략과 합치되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협동조합은 어떠한가? 농협은 과거 정부의 보호 아래 농업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가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다, 생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던 시기였으므로 사업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운영방식의 개선없이 영세한 영농규모 등 열악한 농업여건 하에서

의 협동조합이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조합경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의한 조합을 해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경우처럼 영세한 읍면단위의 시스템 하에서 농협에 거는 기대와 실제 역할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 되고,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주체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추진사항

(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협개혁의 기반조성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04.12.31, 공포)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중 중앙회 관련사항은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전무이사)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유지토록 하였고, 대표이사는 집행간부의 인사권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을 촉진토록 하였다.

둘째, 이사회 내에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앙회 전체 차원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소이사회 결정을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셋째,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회계 및 유통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였다.

넷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에서 자본금 확충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일선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경영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되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연속 12년)로 제한하되 중임은 허용하였다.

둘째,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의 여파가 조합경영에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셋째, 조합설립 남발, 선거시 조합원 이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권 제한 및 중앙회 회원가입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였으나 소규모 조합의 권익대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이나 감사 선거 시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다섯째,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연합자회사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20%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까지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가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목조합연합회에 지역조합의 준회원 가입도 허용하였다.

여섯째, 조합의 결산 잉여금 배당시 출자에 비례한 배당보다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도록 개선하고,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출자 발행을 허용하였다.

(나)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12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를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3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조합 중 합병이 불가능한 2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 후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인근 우량조합으로 계약이전하였고,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도 58개 조합에 총 3,366억원(출연 561억원, 대출 2,80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38개 조합에 964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17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244억원과 대출 1,8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317억원을 출연하였다. 이들 조합에 대출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 중에 6차례에 걸쳐 2,805억원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4년도에도 6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 중에 있고, 33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으며, 부실이 과다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2개 조합과 예금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한 2개 조합이 파산으로 퇴출되었다.

2004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전체 조합중 전년도 26개이던 적자조합이 27개로 1개 조합 늘어나고 적자규모도 390억원으로 전년도 294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당기순이익은 7,59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50억원이 증가하였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27조 2,0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07조 6,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74조 5,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성장하였다.

(3) 2005년 협동조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지난해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04.12.31 공포, '05.7.1시행)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등의 농림부고시를 제·개정하였으며,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설립 규정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세제 감면 방안이 관련법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재경부 및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추진(9월)하여 향후 농업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법 부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신·경분리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나안진회계법인, '05.5~'06.4)하여 추진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동 연구과제가 '06.6월까지 농림부에 제출되면 11월중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인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을 취합 조정하여 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4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2006년부터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순자본비율 4%로 강화되는 점을 감안, 경영약체조합에 대한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2004년 1월부터 부실조사와 관련하여 4개팀(2개팀 확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부실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부실규모가 큰 조합 및 합병·계약이전 등으로 퇴출된 조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부실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9월 30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38개 조합 중 119개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62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297명에 대하여 2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하고 48억원은 소송을 완료하였고, 249억원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농협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상임이사 도입조합 범위를 자산 2천억원 이상으로 규정('07년, 1,500억원이상)하였다.

둘째, 조합의 재무건전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납입확약 총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출자금 확대를 통해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 실익을 제고 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여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개정안으로 인한 기준미달조합은 2년간의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존 1조합 1표방식의 중앙회 총회의결권은 조합별로 조합원 수에 큰 편차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조합별로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격요건에 타 업무의 겸직금지 및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섯째, 조합원들의 동의로 회계장부 등의 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나. 산림조합

(1) 산림조합 현황

산림조합의 뿌리는 조선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로써,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로 조직되었다. 그 이후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1989년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직선제 도입,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산림조합으로 다시 개편(2000.5.1)하게 되었다.

2005년 현재 산림조합 조직은 중앙회와 146개 산림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090명(중앙회 391, 지역조합 1,699)으로 이중 임업기술지도원 803명이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배치되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임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산림조합 개혁과 발전

산림조합은 과거 국토가 황폐화된 시기에 산림녹화를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국민의 수요가 산림에 대해 경제적 자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환경과 공익기능 나아가 사회문화적 기능을 포괄하여 주도록 변화하였음에도 이를 산림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능동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산림조합이 조합원 및 산주와 임업인들로부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사유림경영의 대표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산림조합은 스스로 산림조합중앙회에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산림조합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산림조합법에 반영하여 2004.12.31.자로 개정, 2005.5.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조합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관할구역 내 산주가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비율을 확대하거나 사유림 중 일정비율을 조합원 소유의 산림으로 확보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조합장 출마요건 중 출자 좌수 200좌 이상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수를 15인에서 18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참여범위를 1/3에서 1/2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산림조합의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된 산림조합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골자로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하여 2005.5.2.자로 공포하여 시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2005.4.26.에 조합정관(예)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을 개정하여 지역조합에 통보함으로써 개정된 산림조합법이 5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가) 산림조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조합장 선출을 위해 구성하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선거관리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위촉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임업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일선조합이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절차와 한도를 개정하였다.

셋째, 조합의 재정확충을 위해 법에서 도입한 우선출자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조합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정기준 내에서 회사채와 수익증권까지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산림청장이 필요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 이상인 조합이거나 순자본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으로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합정관(예) 개정

첫째, 산림조합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법률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명예직화한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을 종전 지급액과 비교할 때 30%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제도를 채택한 조합이 10개 조합에서 8개로 감소하였다.

둘째, 조합원의 참여확대, 조합장의 책임경영 확보, 농협·수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23개 조합에 불과한 조합장 직접선거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계속 채택하는 조합은 대의원을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다. 반면,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정관개정 후 최초 조합장 선거에 한해 기존 대의원회(50명 이상)에서 치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로 인해 직선제를 채택하는 조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금회 선거부터(2005년~2008년) 13개 조합이 추가로 전환하였고(23→36조합), 2009년 이후에는 중앙회 소속 144조합 중 142조합이 조합원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밖에 채택된 정관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면서, 조합장 임의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당해 조합장 재임중에는 새로 채택된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정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금

액을 1좌당 5,000원으로, 배당액은 5/100 이상 15/100 이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합정관(예)을 제정하여 중앙회 및 산림조합에 통지하였다.

(다) 조합정관(예) 부속서임원선거규약 개정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정된 산림조합법과 정관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원선거규약을 2005.4월 전면 개정하였으며, 2005.7월에는 부분개정을 하였다.

2005.4월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다. 위탁범위는 당선인 결정을 포함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되, 선거인 명부작성과 확정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이 맡도록 하였다. 반면,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에는 지금까지 조합장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출마한 대의원도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밖에 종전에는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자회사 임원 등이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일까지 사직을 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간 공석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해소하였다.

2005.7월에 개정한 임원선거규약은 조합장선거의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한 산림조합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 금지대상을 선거인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이들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시설 등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선거운동목적 외의 경우에도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부터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금품·물품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키고, 조합설립목적상 허용되는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허용토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 대비표 >

구 분	현 행	개 정(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의2)	<신 설>	○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 - **임·직원 및 후보자**는 제외 ○ 위원의 정수 : 5인이상
○ 자금차입 한도 (제9조)	○ 자기자본 범위내 차입 - **회장 승인으로 5배까지**	○ 자기자본 범위내 차입 - 임업정책수행·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경우 **부회장 승인으로 5배 초과 차입**
○ 여유자금의 운용 (제11조)	○ **은행이 보증**하는 회사채 및 채권형 수익증권	○ **산림청장이 금감위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 가능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36조)	<신 설>	○ 공고사항, 청약방법, 증권의 기재사항, 매입소각방법 등을 규정
○ 부실조합의 기준 (제11조의11)	<신 설>	○ **부실조합의 기준** - 부채가 자산을 초과, 거액의 금융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조합 - 외부의 지원 없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조합 등
○ 외부 회계감사 (제22조)	<신 설>	○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이상인 조합 ○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3) 산림조합 경영진단 실시

산림조합의 자율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한 신용사업이 IMF 이후 급격히 변한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2003년 신용사업부문에서 25개 조합이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조합부실 방지 및 경영정상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WTO/DDA 협상과 각국과의 FTA추진으로 임업과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강구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산림조합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 예산에 조합진단에 관한 소요비용을 반영하였다. (1,400백만원 : 국고 980, 자부담 420)

경영진단은 조합의 부실규모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조합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별 특성을 반영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진단은 중앙회소속 144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경영진단 추진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학계・임업계 등 외부인사로 경영진단위원회(9명)을 구성・운영하였다. 경영진단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등록한 복수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전문성・실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경영진단의 분야는 신용사업과 일반경제사업 부문 등 산림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5~11월)동안 추진하였다. 진행과정은 우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표조합을 6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현지실사를 위한 실사기준과 Templet를 만들고, 이어서 144개 조합에 대한 전면 서면조사를 거친 후 현지실사 하였다.

앞으로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방안과 산림조합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건전한 산림조합육성을 위해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업협동조합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305억원의 무이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자본잠식규모에 비해 지원액이 과소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원인 및 규모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영진단을 추진하여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고 47개 조합에 대해 2010년까지 자본잠식액을 회복하는 목표하에 인원감축, 고정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체결하면서 이의 이행을 전제로 2003년 8월부터 매년 471억원(무이자자금 환산 6,709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합병(2개, '04. 6. 1) 및 계약이전(1개, 04.11.1)을 통해 2004년 총 922억원(합병 376억원, 계약이전 546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2003년 △155억원 적자에서 2004년 471억원의 흑자를 실현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2002년말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인력 985명('00년 6,275명 ⇒ '02년 5,290명), 점포 75개(493개 ⇒ 418개) 축소, 부실채권 감축(10.5% ⇒ 3.9%), 고정자산매각(342억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구조개선법 시행후에는 적기시정조치 및 MOU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인원감축 332명('02년 5,290명 ⇒ '04년 4,958명), 부실점포폐쇄 24개소('02년 418개소 ⇒ '04년 394개소), 고정자산 매각 336억원('03년 295억원 ⇒ '04년 41억원), 출자금 증대('03년 67억원 ⇒ '04년 86억원) 등을 완료함과 아울러 '03. 12월말 기준으로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순자본비율 산출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순자본비율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결과를 동시 감안하여 48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 11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적기시정조치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및 임직원 제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시달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협 회원조합 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원조합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03년 11월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조합(3개) 및 '03년도말 기준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악화된 3개 조합등 6개 조합을 대상으로 '04년 부실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발생의 원인을 분석, 이 중 3개 조합 37명에 대해 2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조합장의 공명선거 확립,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수협의 예금고객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0.12%에서 0.2%로 상향조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부실화된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강력한 독립사업부제 확행을 전제로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75억원, 2002년 550억원, 2003년 711억원, 2004년 1,042억원 등 흑자규모가 대폭확대 추세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어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율이 증가되고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농산물 수급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의 준비태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통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 공급기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0,961호 및 모니터 요원을 1,11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해 오던 채소수급안정사업을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운용해 오던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개방화시대에 맞는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일부 조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고,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

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 10% 수준의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3년 까지 23%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실에 대해서도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 등 과실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처음 도입한 후 2002년에는 단감을, 2003년에는 감귤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사과, 배, 감귤의 사업참여 기준 물량을 기존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 배분 및 보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화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 : 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 초년도 2개 품목이던 것이 2005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확대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지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부터 상품화·유통단계까지 수확후 품질관리, 공동출하·브

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전문조직 280여개소를 선정, 유통활성화자금(2005년 4,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지속하여 농산물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수익성 제고 및 산지유통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 잘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를 2003년 208개소에서 2004년 213개소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량의 5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 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현재 127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인식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은 50.4%('04기준)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표준규격출하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2005년에는 전체 공동선별·포장비의 30% 수준인 52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재 50.4% 수준인 표준규격출하율을 200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정부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인 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직거래 시설 지원 사업(1998~2002)을 통하여 직거래장터 163개소와 파머스마켓 20개소가 개장되었으며, 농협 및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대형유통업체의 농업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직거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상품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지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간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지 생산자가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성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어 직거래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 중심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 단체에 직거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2004년부터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의 직거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 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벗어나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2005년까지 14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07년 까지 2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장 7년차인 2004년도에 2조9,50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전용 도·소매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지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통한 청과물의 거래물량은 전체 거래물량 중 39.6%를 점유하고 있으며, 할인점·대형유통업체의 활성화에 따라 점유율이 '03년 40.9%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의 도매시장 경유 거래물량의 감소 원인을 경직된 거래제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거래제도로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06년 발효를 목표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말 현재 부처의견조회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 중에 있다.

이미 지난 '00년 농안법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시장을 '04.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 운영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 범위 확대 노력과 함께 '00년부터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첫해 4%, '01년 32.8%, '02년 55.5%, '03년 64.2%, '04년말에는 70.8%까지 높아지는 등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전자경매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출하자가 안심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출하체계 개선 뿐만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의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 국가물류비 90.3조원은 국가GDP 725조원 대비 12.5%에 달하며 농산물의 경우도 물류비 7.2조원은 생산액 29.4조원 대비 2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운 배추 등 엽채류는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어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2007년 1월부터는 배추·무의 포장유통을 전면실시하여 정량거래에 의한 유통의 투명화, 소비지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산지에서부터 농산물이 포장되고 파렛트로 적재되어 출하되고, 소비지 도매시장 등에서는 하역기계화 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인상하여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이상이 되고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농산물의 포장출하율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뿐만아니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물류기기 구입시 보조 50%이며 물류기기 임차시에는 임차료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

고 있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560천명의 생산자와 18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수확후 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 신선채소・과일, 수출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근거규정・교육체계 등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및 실무교육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61천건을 실시하였고, 안전성조사 범위를 재배환경과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등)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PDA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금속기준 확대를 위해 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금속 기준 설정위원회('04.11)의 결정에 따라 '06년 농산물 중금속(Cd, Pb, Hg,As, Cu) 기준 설정을 목표로 쌀, 배추 등 주요 농산물 10품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데 이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제재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성조사에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수차례 운영하였고, 농·소·정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소비자의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2003년말 구성하여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WTO체제 출범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유통개혁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의 산림조합중앙회조직 직매장 95개소,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조경수생산단지유통센터 2개소, 종묘전시판매장 1개소와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단기임산물직판장 1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산림이 64%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7%대로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영농조합 등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생산·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 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출하자금(2005년 5억원) 및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매자금(2005년 505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6개소(2005년 72억원) 및 홍수 출하기 임산물의 적기 수매를 위한 단기임산물 수집자금(2005년 15억원)을 지원하여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유망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지역 특산물을 중점 개발토록 60개소의 임산물 주산단지를 지정하여 주생산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통의 효율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밤, 표고, 대추 등 15개 품목에 대한 표준출하규격을 제정·고시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자재비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지역별 브랜드화된 임산물의 유통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2005년도 현재 표고 품목을 추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05년 2억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대추에 대한 관측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2006년도 3억원)이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2005년도 현재 421개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고, 2010년까지 1,000개 임가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장뇌 등 수입임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정화활동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산림조합 계통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임산물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 다양한 품목과 크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어획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유통구조가 필요하며, 정부는 유통의 왜곡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수많은 유통개선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거래형태가 형식경매 등 농안법에 위배되고, 가격 등 거래정보가 투명하지 못하여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도매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도매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가락, 노량진, 구리 등 수도권 3개 도매시장에서 패류 11개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를 추진하여 2002년 8월까지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2003년 9월 1부터는 선어부류까지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매 당일 어대금 정산으로 생산·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매시행 후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직거래 사업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지게차,전동차 등 하역장비 구입비 338백만원, 표준규격 어상자 구입지원 대금 2,420백만원 등 총 2,758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수산물표준규격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04.12~'05.12)중에 있다.

넷째, 수산물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95~2006년중 1,996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신규 또는 노후화된 산지 수협의 위판장 2~3개소을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가. 농림행정 추진조직 개편

(1) 농림부

(가) 실무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등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이 집행업무에서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정책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실무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6급 이하 정원의 10%인 11인을 5급으로, 소속기관은 7급 정원의 5%인 21인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하였다.

해외 악성가축질병과 수입식물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검역인력 2인을 증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 각 5급 1〕하였다.

한편, 부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전문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농업연수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받아 농업연수원으로 개칭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강화를 위해 3인(4급 1, 5급 1, 6급 1)을 증원하였다, 아울러 혁신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담당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였고,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 1인(기록물연구사)을 증원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농림부령 제1457호, 2004. 2. 11)>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단행

쌀협상 이후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거대경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 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FTA)과」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분야에 과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523호, 2004. 8. 1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81호, 2004. 8. 10)>

첫째, 쌀소득보전기금법 제정·시행과 쌀협상 이후 쌀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식량정책국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득정책과 및 소득관리과를 신설하였다.

둘째, FTA가 WTO와 함께 세계교역 질서를 형성하는 축으로 부상하고 20여 개국과의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FTA 농업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FTA)과」를 신설하였다.

셋째,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과 홍보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정책홍보팀」,「정보상황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예산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2·3급)하고 1인을 증원하였으며, 부내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정책기획팀」을 신설 하였다.

넷째, 직렬 구분없이 능력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될수 있도록 과장급 직위를 복수직렬화하였다. 본부의 과장급 행정단수 직위(감사담당관 등 8개 직위)를 행정·농업 복수직위로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무과장 등 3개 직위), 국립종자관리소(관리과장 등 6개 직위), 농업연수원(5급 행정 1인, 농업 1인) 관련 직위도 복수직렬화 하였다.

(다) 고객 서비스 강화 및 해외 동식물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인력 보강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동·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경 검역기능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 분야에서 농업인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출장소를 증설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선기관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10개 출장소를 증설

○ 남북육로개설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고성 출장소를 신설하고 2인을 증원

(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06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지난해 추진된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 농가소득안전추진단 신설·자유무역협정과 신설 등 '05년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06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농지은행제도 운영 인력, GAP・Tracebility 관리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안전성 조사과 신설・운영인력,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리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연수부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청사방호인력 등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축산물위생감시과・인수공통전염병과 신설・운영인력, 검역탐지견센터 운영인력, 인천공항 검역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세라・수퍼박테리아 연구 인력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인력 등

(마) 농림부 2006년 직제개편 추진 계획

지난해 실시된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와 최근 각 부처에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팀제・총액인건비제도 등 각종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농림부가 설정한 비전, 미션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산분야 조직정비

선진 통상국가 도약의 일환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진,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수산식품 안전성 강화, 수산자원 회복관련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을 전담하는 '통상협력팀', '품질위생팀' 및 '수산자원회복팀'을 각각 신설하여 해양수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수산과학 연구기능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본부제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06년부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수산관련 연구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인력개발본부의 독립을 추진하고, 경의선 및 동해선 개통에 따라 급증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05년 말 출입국 수속기관(CIQ) 설치와 병행하여, 도라산, 저진지역에 수산물품질검사지원의 설치를 추진하며, 양식어장 등 수산세력이 큰 전남 강진지역과 충남 태안지역의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에 해양수산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3) 산림청

(가) 2005년 소요정원을 반영한 조직개편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2005.1.1 시행)과 관련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소요정원 협의결과를 반영한 직제개정을 2004.12.31자로 앞당겨 추진하였다.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백두대간보전과를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신설하였으며, 변화하는 산림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 훈령으로 홍보팀, 숲가꾸기팀, 산림보호지원팀 등 3개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와 관련하여 산림청에 7명(4급1, 5급4, 6급1, 기능직1), 국립산림과학원에 3명(임업연구관1, 임업연구사2) 등 총 10명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정원 14명(4급1, 5급2, 6급6, 7급4, 기능직1)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에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25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유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정원 45명(5급1, 6급10, 7급10, 8급10, 9급11, 기능직3)을 전환배치 하였다.

또한, 하위직 직렬간 승진격차로 인한 갈등해소 등을 위하여 복수직렬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5급 이상은 종전 59개 직위에서 119개 직위로, 6급 이하는 종전 28개 직위에서 189개 직위로 확대되어 종전 87개 직위(5.9%)이던 복수직위가 308개 직위(20.4%)로 확대되었다.

조직개편에 따라 3국 1관 17과 체제에서 3국 1관 18과 3팀 체제로 1과 3팀, 1관리소가 증설되고 정원 25명이 증원되었다.

(나) 2005년 수시직제 개편

2005년에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우선 2005.3.2. 정책역량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에 계획한 실무공무원 직급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일부 직급이 조정되었다. 따라서 산림청의 6급 정원 1명과 7급 정원 2명이 5급으로 조정되었고, 소속기관의 7급 정원 4명이 6급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소요정원에 합의된 기록관리전담인력 1명(본청 기록연구사)이 증원되었다.

2005.4.15. 산림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시 직제개편이 추진되었다. 2004년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산림청에 2명(5급1, 6급1), 국립산림과학원에 6명(임업연구관2, 임업연구사4)명 등 8명이 증원되는 한편, 산림청의 정책홍보기능 및 재정기획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관리관은 정책홍

보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재정기획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1, 5급1)을 증원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보호 기능의 신설 등에 따른 지방산림관리청장 위상 강화를 위하여 동부 및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의 직급을 80여 년과 40여 년 만에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종전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홍보팀, 숲가꾸기팀, 산림보호지원팀을 직제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홍보팀을 정책홍보팀으로 개편하였다.

※ 조직 및 정원(2005.11.30 현재)

○ 조직 : 산림청(3국 1관 13과 2기획관, 3담당관, 3팀)과 9개 소속기관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4개 연구소),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7개 지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개 지방산림관리청(25개 국유림관리소)

○ 정원 : 1,519명(산림청 204, 소속기관 1,315)

(다) 향후 조직개편 추진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 국유림 확대, 휴양림 교대근무제 도입 등을 위하여 산림청과 소속기관에 4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06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였다.

2006년도 소요정원 협의결과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 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2006.1.1자로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직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림청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를 신설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명(4급1, 5급1), 산림재해방지 상황실 설치를 위하여 3명(5급1, 6급2), 동영상 촬영 등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1명(별정7급) 등 총 6명을 증원하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산림관리청에서 2명(6급2)을 전환배치하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는 산림평가연구팀을 신설하고, 산림평가 연구를 위하여 7명(연구관3, 연구사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을 위하여 2명(연구관1, 연구사1), 산림종자 연구를 위하여 1명(연구사1) 등 총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의 임업연수부를 산림청 직속의 산림인력개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교대근무를 위하여 12명(6급6, 7급6)을 증원한다.

지방산림관리청은 위상에 걸맞도록 명칭을 지방산림청으로 변경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하여 4명(6급4), 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6명(6급6), 서부지방청 선박관리를 위하여 2명(기능7급1, 기능9급1), 국유림확대에 따른 경영관리인력 2명(5급2) 등 총 14명을 증원하는 한편, 산림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명(6급)을 산림청으로 전환 배치하고, 통신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로 통신원 8명을 전환 배치한다.

이와 함께 동부지방산림청 소속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를, 서부지방산림청 소속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를 신설하고, 평창국유림관리소장과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농림행정 규제완화

2005년도에는 농림부 소관 모든 기존규제(503건)를 개별규제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며 규제방식은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자율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규제정비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년도 규제 정비 주요 계획은 2006년까지 향후 2년간 총 44건의 규제를 우선 집중정비하고 나머지 규제도 정비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중점정비 대상분야는 농지분야로 선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편익증대를 제약하는 이용규제 및 보전규제 등을 중점개선하고 유통·축산분야 등의 규제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규제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분야 규제정비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실시 등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분야 등의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피규제집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통한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현장인식 제고 및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규제정비 개선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의 분야별 추진계획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의 폐지, 상속이농 농지소유상한 예외허용 등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완화와 농업진흥지역에 소득 및 편의시설을 허용하는 등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의 확대 등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제완화 등 농지분야에 대한 규제정비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 허용, 가축전염병 예방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초지의 부실관리 시정지시 의무규정 폐지, 사료의 품질검사 의무조항 규제개선 등 축산분야의 규제정비를 폭넓게 추진하고 또한, 농산물가공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농수산물 규격화 촉진을 위한 명령 폐지 등 농산물 유통분야의 규제완화 등 농림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산림분야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이용증진 측면에서 민간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규제총량제, 모든 규제의 등록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 등의 도입으로 규제의 신설·강화를 강력 억제함으로서 국민의 편익 및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산주의 자율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5년도에는 산림분야의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 확대, 산지복구 의무면제 대상 확대, 산림분야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각종 허가의 연장신청기간 확대 등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인·허가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점규제개혁과제로 산지전용관련 제도개선을 선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완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환급에 관한 규정 명확화, 보전산지내에서의 산지전용제한 완화,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자원·국유림경영·산림휴양의 3개 분야 법률로 분법화를 추진하여 2005. 6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8.4.자로 공포(시행 2006.8.5)되었으며, 향후 3개 제정법의 하위법령 제정시 규제 신설·강화가 불가피하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심사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의 신설·강화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산림분야의 규제정책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휴양객 증가 등 다변화되는 국민적 요구와 산림정책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산림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3) 수산분야 법령정비

수산관계 법령 정비에 있어 2005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를 위해 「낚시어선업법」을 개정하였고, 둘째, 면허어업의 방법과 규모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와 같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등을 개정하였다.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9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74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 8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90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01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09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17

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137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3%,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3ha이상 농가가 출현토록 노력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상환기간은 10~30년 차등화하고 균분, 거치, 체증상환 등 자금상환 방식을 다양화하여 쌀전업농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05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1,505ha, 4,769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

가 4,010ha, 2,903억원, 농지임대차가 7,445ha, 1,839억원, 농지교환·분합이 50ha, 2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면적, 쌀전업농수, 2005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 2005년 영농규모화 추진계획 >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 계획(A)		2004 실적(B)		증 감 (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11,505	476,941	8,128	309,212	3,377	167,719
농지매매	4,010	290,325	2,560	183,992	1,450	106,333
임 대 차	7,445	183,891	5,507	121,505	1,938	62,386
교환분합	50	2,725	61	3,715	△11	△1,000

나. 경영이양 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경작 경력이 10년이상이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를 경작(질병·사고 및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3년중 1년이상 경작자 포함)하고, 연령이 63세~69세 범위의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장기임대 하고 영농에 은퇴하는 경우 ha당 매도시 연간 2,896천원(분할지급시 매월 241천원씩 연령에 따라 2~8년간 지급), 임대시는 연간 2,977천원을 1회에 한하여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ha까지 이다.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121) 체결에 따라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매도·임대 동일한 조건으로 ha당 2,977천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해 주고 있다.

2005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8,278ha, 27,654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2004년도 사업비 초과 신청접수 물량 및 2005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금년에는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경영이양직불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분할지급 방식 등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여 이들의 농지가 쌀 전업농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는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내 경영이양 대상농지에서 쌀전업농이 집단화 할 수 있는 진흥지역내 우량농지와 향후 농지은행 보유농지에까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 2005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 계획(A)		2004 실적(B)		증 감(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8,278	27,654	4,789	13,628	3,489	14,774
농지매매	2,137	9,324	650	1,315	1,487	8,008
임 대 차	6,141	18,330	4,139	12,313	2,002	6,017

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판매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작목반·영농조합을 계열화함으로써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은 다시 광역의 연합조직에 계열화하여 마켓팅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목반·영농조합과 같은 기초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있어서 정보교환 등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수확후 관리, 소비지 출하 등을 일선조합이 수행하도록 하며, 광역의 연합조직은 유통정보,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판촉 등 마켓팅 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공동출하사업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80개소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정하여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등 품목별 지도·지원의 중심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연합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혁신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담당하는 품목별 전국협의체 결성을 촉진(2005년 30개 연합조직)함과 아울러, 해당품목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연합조직에 자조금 조성을 보조지원(2005 : 35억원)함으로써 생산자조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도 종합자금지원은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10백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사업이 통합되어 총 운용규모 7,511억원(농특자금 1,502억원, 농협자금 6,009억원)으로 반영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있다.

<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까지실적	2003실적	2004실적	2005계획	2006계획
합 계	1,041,500	452,253	753,568	751,100	876,100
농특자금	496,200	106,450	117,079	150,220	175,220
농협자금	545,300	345,803	636,489	600,880	700,880

2003년에는 3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관광농원 개발, 농촌민박마을 조성, 자가배합 사료제조 시설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산지일반가공육성, 전통식품개발,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하였다. 2005년도에는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1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을 통합하여 총 26개 농업분야 융자자금을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도 남아 있다.

앞으로 대출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확충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력의 급감과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력이 농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50명을 선정,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종전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경쟁력 제고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에 편입·지원토록 개편하였다.

아울러 '05년부터는 농업·농촌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3개시범사업(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대학생창업연수)을 도입하여 우수인력이 조기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조기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2005년에도 2004년에 이어 농업경영체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기관별로 상이한 농업회계처리방식을 표준화하고, 생물자산에 대한 평가·수익인식 등 품목별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며,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농업경영체에 보급하여 통일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창업단계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①농업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및 후견인제

를 각 1,000명 수준까지 확대('05년 각 100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②한국농업전문학교도 정예인력 양성 핵심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③농대에 영농창업 Track제를 실시하여 농업관련 학교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평균 4,500명의 젊은 인력이 신규로 농업에 정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후계창업농에 대한 자금지원('05년 : 1,000명, 800억원)도 확대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전문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①기존 교육과정을 품목별·수준별 전문과정으로 세분화·전문화하고, ②농업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가 자신에 맞는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Voucher제도(지불보증쿠폰)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③경영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교육과 연계한 자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주도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농업경영컨설팅을 경영·마케팅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컨설팅업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에게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심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컨설팅 대상을 농가위주에서 품목별 전문조직과 법인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농업경영체 상호간에 기술, 노하우, 투자정보 및 창업정보 등이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 CEO협의회가 구성·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농업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훈련된 강사를 통해 적극 전파함으로써 농업을 희망이 있고 돈이 되는 전문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규인력 유입도 최대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4년에는 7개국에서 2,000명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체에 배정하여 인력난을 덜어주는 등 농업법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농업교육 체계 개편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의 신성장동력인 새로운 지식과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2004년도 2,835백만원 지원으로 농업인 41,375명을 교육하였고, 2005년도에는 3,570백만원을 지원하여 46,969명을 교육하였다.

FTA와 DDA협상의 진전 등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05년도 새롭게 농업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

새로운 농업교육 패러다임의 주요한 특징은 개별 농업인 맞춤형의 전문교육체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농업인에게 배워서 돈되는 현장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교육주체로서 생산자단체·일반 농업인단체·지자체·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한 교육내용으로는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유통·마케팅·브랜드 교육, 경영기법 교육 등이고, 이는 농업소득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농과계 학교의 농업인력육성 기능 회복을 통해 젊은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비농업계 인력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도 실시할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교육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기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필수교육과정 인증제, 전문기술 교육장 지정제, 전문강사 Pool 구성 등 현장위주 전문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고, 교육평가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육관리의 효율화 및 교육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다.

(4)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이 보다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업비 지원한도를 농업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에서 농업인 15백만원, 법인 30백만원으로 높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도 원예·특작, 축산분야 경영체,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APC(산지유통센터)·쌀 전업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자부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업체의 전문화·규모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업연수원을 통해 컨설턴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5)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특수농법, IT·BT 등 관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센터별 운영성과를 평가, 차등 지원하여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05년도에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가 모두 수도권에 배치된 점을 감안, 권역별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정 받은 창업보육센터 중 농업분야로 특화가 가능한 보육센터를 영호남지역에서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투자조합을 통한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 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6)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가)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2005년도에는 급속하게 변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 강화 및 신지식·신기술 농

업에의 적응력을 키우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비중을 강화하였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농업협동조합회원조합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의 40%이상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른 전문 영농기술 및 농기계 조작훈련, 농산물 가공·상품화·농작업관리·노동경감기술 및 영농신기술 체험교육 등의 영농기술교육도 농촌진흥청과 농협을 통해 연간 5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을 숙지하여 현장감 있는 눈높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요원의 확보를 위해 「여성농업인교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개반 30명을 대상으로 연6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농정관련위원회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에 따른 여성위원의 역량 개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성농정위원반 및 농촌의 환경과 자연을 관광 자원화하여 농촌체험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농촌체험가이드반을 농업연수원 정규 교육과정으로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위원회 등에 여성참여 확대

신규후계농업인 선정은 '04년부터 35세 미만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창업농 신청시 가산점 20점을 부여하여 연차적으로 후계농업인 선정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정부

목표인 36%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농협 참여확대를 위해 조합원 가입 홍보 및 지도강화를 통해 여성조합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대의원 및 임원에의 여성 진출도 적극 추진하여 대의원 5,500명, 임원 35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유도

2005년도 중 여성농업인센터는 2004년보다 7개소가 늘어난 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관계로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라)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2000년 도입한 농가도우미 지원제도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범위 확대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농지 소유규모 2.0ha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동 사업은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 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447억원의 예산으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5세아는 100%) 수준인 1인당 월 평균 약 12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체계적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을 위해 2001년 제정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05.11.5 시행)하여 시·도지사도 시·도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하에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인 지역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를 2004년 여성부와 공동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하여 실시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농림사업 중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삶의 질 향상 및 정부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과 이해도 제고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여성농업인정책반」교육을 4박 5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2005년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에 이어 제2차 계획(2006년-2010년)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로서 1차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도별 순회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바.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류 및 육성자금의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조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으로 숙련된 전문임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400천ha중 69%에 해당하는 4,441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들을 확대 선발하기 위하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2005.6.30)하여 임업후계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2004년말 기준 독림가 350명, 임업후계자 1,363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2004년도에는 독림가 51억원, 임업후계자 69억원, 총 1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독림가 34억원, 임업후계자 45억원, 신지식임업인 1억원, 총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2006년부터는 현재 3%에서 1.5%로 낮춰 이자율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20명) 확대 및 임업선진국 해외연수 기회(20명)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사.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총 13,811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2,437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2005년도에는 311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94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

구 분	1981~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인 원(명)	11,145	625	547	581	534	379	13,811
○자금(억원)	1,762	159	143	143	135	95	2,437

(2) 전업어가 육성지원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어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전업어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업어가가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자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2,176호의 전업어가를 선정하여 1,1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도 97호에 49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어업경영체로 육성하였다.

(3) 선도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 수산계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총 42개소를 선정하여 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006년도부터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10억원)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년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2004년말 현재 942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어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추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논면적 1,115천ha중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4년 봄까지 전체 논면적의 65%인 720천ha를 완료하였으며, 쌀산업 여건과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수요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당초 개발목표면적 중 50ha 이상으로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2004년까지	2005년계획	2006년이후
○ 사 업 량	1,127	800 (915)	720 (826)	- -	80 (89)
- 농 업 진 흥 지 역	770	665 (760)	634 (726)	- -	31 (34)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357	135 (155)	86 (100)	-	49
사 업 비	-	70,024	70,024	-	-

※ 마무리 기준, ( )는 용배수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2) 우량농지 164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04년 봄마무리까지 92천ha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가을에 착수한 4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5천ha를 착수하여 2006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쌀 산업 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당초 개발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재정비하고, 수리시설 개량만으로 영농여건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 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2004년까지	2005년계획	2006년이후
○사업량(천ha)	164	92	4	68
○사업비(억원)	46,886	22,953	1,218	22,715

※ 마무리 기준, 20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3)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밭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제고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19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110천ha(15%)를 정비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4년까지 13,09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53%인 58천ha를 정비하였으며, 2005년에는 1,272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5천ha를 정비할 계획이다.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2004년까지	2005년계획	2006년이후
○ 사업량(천ha)	110	64	5	41
○ 사업비(억원)	25,794	14,585	1,272	9,937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

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35천km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까지 14,127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의 43%인 15.1천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05년에는 1,340억원을 투입하여 1.3천km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로 등 일상 생활도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목 표	2004년까지	2005년계획	2006년이후
○ 사업량(천㎞)	35	15.1	1.3	18.6
○ 사업비(억원)	37,071	15,377	1,340	20,353

(5)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재해취약시설과 흙수로 8,769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2,747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6,527개소이고, 간지선 용·배수로의 경우는 48천km중 52%인 25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20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3,284개소 등 전국 3,490개소의 방조제, 배수갑문 등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4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 5,423개 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107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971개 지구에 총 33,77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113억원을 투입하여 141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구 분	개보수 대 상	%	2004까지	%	2005 계획	%	2006 이후	%
	개소							
○ 사 업 물 량	12,259	100	6,501	53.0	141	1.2	5,617	45.8
- 농기공수리시설	8,769	100	5,423	61.8	84	1.0	3,262	37.2
-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07	51.9	1	0.5	98	47.6
-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971	29.6	56	1.7	2,257	68.7
	억원							
사 업 비	127,265	100	33,777	26.6	4,113	3.2	89,375	70.2

※ 방조제는 반복 개보수계획 반영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235천ha로서 이중 지표배수개선 대상면적은 188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삽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배수개선 대상면적은 47천ha로서 수렁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04년까지 우선 시급한 지표배수개선 위주로 추진하여 대상면적 188천ha 중 128

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109개 지구에 2,165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11개지구 1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69%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대 상	%	2004년 까지	%	2005년 계획	%	2006년 이후	%
	천ha							
○ 사 업 량	235	100	131	55.7	1	0.4	103	43.9
-지 표 배 수	188	100	128	68.1	1	0.5	59	31.4
-지 하 배 수	47	100	3	6.4	-	-	44	93.6
	억원							
○ 사 업 비 (지표배수)	43,252	100	22,592	52.2	2,165	5.0	18,495	42.8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상습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2004년까지 총논면적 1,127천ha중 878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수리답이라도 웬만한 가뭄(10년빈도)에 견딜 수 있는 논면적은 440ha(총논면적대비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까지 전체논 목표면적 1,100천ha중 900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5년도에는 2,912억원을 투자하여 53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10천ha를 완공할 계획이나, 앞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총논면적	목 표	2004년까지	2005년계획	2006년이후
1,127천ha	1,100	884	10	206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규모화·집단화된 새로운 간척농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에 의한 교통환경개선·종합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새만금을 비롯한 7개 지구, 122천ha로 2004년까지 47%(31,296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에는 3,200억원(국고 910억원, 농지관리기금 2,290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율을 52%로 제고할 계획이다.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계(7지구)	121,560	66,800	31,296	3,200	32,304	
금 강(Ⅱ)	43,000	6,540	3,389	400	2,751	1989~2008
미 호 천(Ⅱ)	4,430	2,912	2,180	70	662	1989~2008
홍 보	8,100	3,812	2,285	220	1,307	1991~2010
영산강(Ⅲ-1)	13,160	7,072	3,616	430	3,026	1985~2006
영산강(Ⅲ-2)	7,840	4,279	1,863	400	2,016	1989~2010
영 산 강(Ⅳ)	16,730	7,429	480	180	6,769	2001~2007
새 만 금	28,300	34,756	17,483	1,500	15,773	1991~2011

(9)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2004년까지 전국 130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에 4,55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3개 권역내에 254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등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2007년부터 2단계 65개 권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낙후어촌의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되 도시민의 어촌정주지원방안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가)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촉진 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산업 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사업 추

진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정책 제도개선과 농업인의 편의 및 농기계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정책자금의 효율성제고와 농업인의 적정한 농기계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는 1,000만원이상의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행정구역 중심의 5단계로 되어 있는 소규모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A/S능력 중심의 대·중·소형 3등급으로 조정하여 A/S능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율제고와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의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2005년도에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유통의 효율화 및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를 계속 추진하여 농기계 수리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2005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기본을 유지(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의 기준, 신기술농기계와 밭작물·축산전용 농기계에 대한 우대지원 등)하면서,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70%에서 90%까지 우대 지원하여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고품질벼 생산

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와 기본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10%이상 인하한 경제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20% 상향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완화와 국산농기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였다.

2005년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2,000억원(국고융자 400, 농협융자 1,000, 자부담 600)으로 27.7천대분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 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완화에 노력하였다.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가)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2005년에는 120억원의 수리용부품 자금을 지원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수리점 등 면단위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도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뿐만 아니라 수리·정비용 건축비 등 사후봉사업소의 시설현대화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전산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연 2회)를 계속 추진하여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제외 또는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 하에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 154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할 계

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를 780명 양성하는 등 130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 증진을 위해 일반농가보관창고 80개소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설치비의 70%를 융자지원하였다.

(다)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중고농기계 거래시장은 중고농기계 적정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중고농기계의 품질보증제도를 중고트랙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등 중고농기계 거래로 인한 농업인 피해방지와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고농기계에 대하여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였으며, 기 지원한 20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에 따라 중고농기계의 융자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신기술농기계공급 촉진과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중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지원에 1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연리 3%, 융자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국산화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지원 하였으며, 금년도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은 18개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시설농업기자재자금은 4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5년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휘발유 143,000㎘, 실내등유 406,800㎘, 보일러등유 1,300㎘, 경유 2,016,700㎘, 중유 86,500㎘, 윤활유 7,100㎘, LPG 2,200톤 등 총 2,663,000㎘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을 배정받아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조합별로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였다. 이에 따른 2005년도 면세액 추정은 1,210,072백만원에 이르며,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유종별 리터당 휘발유 535원, 경유 323원, 특별소비세는 등유 154원, 중유 15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24.0%이며, 판매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시한이 2007.12.31일까지 되어 있으나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8,432억원(국고보조 2,684, 국고융자 2,358, 지방비 130, 자부담 3,260)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328개소의 신규 RPC를 설치하였다.

가공시설능력이 충분함에 따라 1999년 이후 가공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건조·저장시설은 2004년까지 639개소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69개소(410만석)의 추가 설치하여 수확기 유통량의 70%(1,100만석)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WTO/DDA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될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2004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우선,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RPC간 통·폐합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으로 경영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통합 RPC에 대해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단위 : 개소, 억원)

	1991년~2004년	2005년	2005년~2013년	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328개소 (568개소)	- (50)	- (619)	328 (1,308)
총 사 업 비	8,432억원	235	3,474	12,141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밭기반 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구축과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2년까지 총 9개소(이중 2개소는 부도로 인해 제3자가 인수 운영)를 건설·운영중이다.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농업 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4년말까지 2,92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105개소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6,805억원, 농어촌 유휴인력 고용은 약 6,996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5인이상 농가공동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 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5년도에는 농업종합자금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농산물가공업체도 부도 등 일부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영세·한계업체 221개소 퇴출로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나. 종자산업의 육성

19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추진중이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2005년말 현재 90여 업체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육성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금리 4% → 3%)인 농업종합자금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1995~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지원금액	15,057	2,380	2,965	2,280	1,935	1,983	종합자금제 전환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수출실적은 18,222천불로 1997년 대비 53.2%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당시 27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005년 현재 155개 작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1)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신품종의 국외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중이다.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서 현장애로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을 3개 사업 영역으로 개편(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과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및 농산업기술개발사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기존 기획연구개발사업 및 첨단기술개발사업)은 국가정책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긴요한 중점기술과 생물, 물리, 화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와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기존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및 농업인개발과제)은 영농·영림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농림업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농산업기술개발사업(기존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사업개편 개요 >

	사 업	지원분야	지원기준
현장애로 농 업 인 첨단기술 기획연구 벤 처 형	**핵심전략 기술개발** (Top-down)	- 생명공학기술 등 - 정책목표달성기술	과제당 10억원이내 *전략기술 : 20억원이내
	현장적용 기술개발 (Top-down, Bottom-up)	- 현장애로기술 - 지역별 특화기술 등	과제당 5억원이내
	농산업 기술개발 (Bottom-up)	- 고부가제품 개발기술 - 수출촉진기술 등	과제당 5억원이내

(2) 연구개발 추진현황

2004년말 현재 총 3,319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과제가 87건,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과제가 3,093건, 농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가 139건이다.

2004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2,533개 과제로 이중 464개 과제는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었고, 1,301개 과제는 산업체에 이전 추진중에 있으며, 768개 과제는 교육지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 1,456건,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12,283편으로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

구 분	연 구 과 제			
	선 정	계 속	완 료	기타(협약 해약, 중단 등)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87	22	65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3,093	631	2,378	84
농산업기술개발사업	139	30	90	19
계	3,319	683	2,533	103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천년약속	버섯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콜을 이용한 건강기능주(2005 APEC 공식 건배주)	210	동의대학교 ((주)천년약속)	○2004년 4월 제품생산 ○2005년 30억원 매출 추정 ○2006년 100억원 이상 매출예상
농업용 저수지 수위 관측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저수지 물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관측 시스템 개발	140	농어촌연구원 아이에스텍(주)	○2005년 현재 20개소에 보급 1억4천 매출(대당 700만원) ○2006년도 50대 보급계획 ○2011년까지 전국 1,250개소 보급 계획, 50억 이상 매출예상
씻어나온쌀	알칼리 이온수로 씻은 뒤 급속 건조시킨 쌀 (쌀벌레, 곰팡이, 변패없음)	779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주)라이스텍)	○2000년 12월 제품생산 ○2002년 27억, 2003년 50억, 2004년 92억 매출 ○2005년 120억원 매출추정
건강홍미	홍국균을 이용한 쌀로 고혈압예방, 혈압강화 등 심혈관계질환에 효과있는 쌀	223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주)제네티카)	○2001년 1월 제품생산 ○연간 5억원이상 매출을 올림 ○2006년 이후 20억원 매출예상
거대배아미	쌀눈을 키워 건강기능성 성분을 증진시킨 특수미	240	서울대학교 ((주)신지)	○2004년 상품화하여 11억원 매출 ○2005년 30억원 이상 매출예상
장생도라지 리큐주	장생도라지를 이용해 생약제를 첨가한 한방침출주 개발	130	(주)장생도라지 ((주)장생도라지)	○2005년 12월부터 제품생산 ○2006년도 5억원 이상 매출예상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헤파칸	헛개나무로부터 간질환치료제 및 숙취해소제개발	298	국립산림과학원 ((주)생명의나무)	○2002년 상품출시 이후 2005년까지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 ○현재 수출상담 중이며, 2006년 매출 100억원 이상 예상
에코바이오	퇴비 부숙촉진 하는 악취저감 미생물로 축산분뇨처리	105	축산연구소 ((주)우진B&G)	○2001년 5월 생산 ○2004년 44톤 판매(3000원/kg) 3억원 매출 ○2005년 50여톤 판매추정
녹차음료	녹차를 이용하여 음료개발	99	한국식품연구원 (보성녹차)	○1999년부터 녹차 캔 '보성녹차' 생산, 2005년까지 90억이상 매출 ○2006년 80억원 매출예상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1999년) 및 농특세(1994년)를 재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수산부문 기술개발사업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대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과제현황

2004년까지 총 424개 과제를 선정하여 335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89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연구가 완료된 335개 과제중 34개 과제가 산업체에 기술이전되었고, 49개 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39개 과제는 어업인 기술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177건은 특허출원하는 등 연구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제1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보화 기반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농업인들의 정보화 이용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농업인들의 정보활용도가 미흡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농업정보 콘텐츠 제공 및 정보화 교육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 농림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정보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일반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통신망 구축은 민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가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도・농간의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온 결과, 2004년말 전국의 농어촌지역 가구의 95%가 초고속통신서비스(ADSL)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초고속망 구축이 어려운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예산지원을 통해 '07년까지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보급・추진할 계획이다.(2005년 정보화촉진기금 500억원)

또한, 농업인의 정보이용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간, 산업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인 디지털 사랑방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은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단위로 PC 5대, 프린터 1대, 위성TV 1대 등 시설설치 및 마을홈페이지 구축으로 마을주민들의 정보화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는 5개 마을을 시범지원하였고 2004년, 2005년 각 20개소를 지원하여 총 45개 마을을 지원하였다.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까지 정보화 취약계층 농업인 40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중 10만명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장부작성, 전자상거래 활용 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정보화 교육은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의 사정을 감안해 주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인근 관내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비스를 전국 22개 농업계 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탑재한 특장차 버스를 이용하여,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이 가능하며, 농업·농촌 정보화를 선도할 열의가 있는 자를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선정하여 인근 마을의 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장방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집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의 지역농협등은 인터넷·컴퓨터 활용교육, 농업정보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국 22개 농업계 대학 등에서는 농업용S/W활용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발굴·보급, 정보경진대회와 농업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 등)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3)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실제경영에 도움되도록 관련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있는 농업정보 중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이다. 지난 1994년부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PC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00년에는 인터넷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품목종합정보, 농업뉴스, 생활·문화·교육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망은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확대하고, 품목중심의 사이트 개편, 농업인 성공사례 등 앞서가는 농업인 소개코너 운영, 우수 동호회지원 등으로 잠재고객과 휴면회원의 활동재개 등으로 일평균 방문자수가 2004년 5,400명에서 2005년 8,000명으로 48%가 증가하는 등 방문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5년에는 영농일지 등 농업인 참여 컨텐츠를 확대하고, (주)대교를 통해 유아,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 동호회를 집중육성하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www.chulha.net)」은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시 필요로 하는 시장가격, 출하상황, 가격전망 등 유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언제 어느 시장에 얼마만큼 출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가격등락이 심한 주요 채소류 5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하여 2000년부터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에는 도매시장 주요거래 67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오이·상추·사과·장미·한우·돼지·호박·파·당근·수박·참외·토마토·단감·감자·배·감귤·육계·계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하지원시스템(www.chulha.net)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정보 내용으로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별·법인별·가격대별 출하물량을 분석한 정보와 집중출하시기의 가격·거래물량·가격변화 등의 분석정보가 각종 그래프와 함께 제공된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가격전망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전문가를 지정·운영하여(현재 110명) 매일 주기적으로 전화인터뷰, 게시판 등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공하는 등 주간 핵심요약정보와 빠른가격조회 등으로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품목별 출하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인력풀 운영내실화, 정보제공매체 다양화(유무선 인터넷,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시장교섭력증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정보화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추진해온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4년까지 1,706농가를 지원했고, 우수홈페이지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농업인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에 중복문제 발생가능성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시군·시도·농림부에서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조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업무경감과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농림행정의 혁신을 목적으로 구축중인 사업이다.

'04년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AgriX추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사업 이전에 구축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04.11 ~'05.4). 시범사업을 통해 일선 시도·시군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05년도에는 직접지불제 사업군과 산지유통관련사업 등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신청서식 표준화 및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5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서식 표준화를 통해 공통서식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기본DB를 구축하고 정책기초자료 제공, 사업대상자 관리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off-line에서 on-line(사업신청-대상자선정-사업이행-자금집행)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별도보고 없이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도 이에 따르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AgriX를 통한 기대효과는 반복·중복처리 비효율제거 등 행정비용 절감등 약 32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이력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보전 실태를 정보화하여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자원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동 시스템을 확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생물종지식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실적은 1단계(1998)에는 기반구축단계로서 C/S환경의 관리시스템 및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2단계(1999)에는 활용단계로서 웹환경의 인트라넷 정보망 개발 및 보전기관, 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다.

3단계(2000~2001)에는 DATA 구축단계로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식물표본관(15개소)별 표본정보의 DB를 구축하였고, 식물 식재위치를 GIS와 연계하여 식물식재지에 대한 결과분석이 가능하도록 GIS응용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단계(2002~2003)에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단계로 12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곤충표본정보 DB를 구축하였고, 동기간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식물종은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식물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단계(2004)에는 기존에 구축한 식물·곤충 종정보 및 표본정보의 DB 표준화와 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미비된 곤충종정보와 자연생태동영상 등 생물정보 DB를 추가 구축하고 도감정보를 재정비 하였다.

6단계(2005)에는 국가생물종지식DB구축을 13개 대학 및 2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표본 및 균류도감 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기구축된 지식정보화 사업 중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정보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생물자원정보 사업을 통하여 기초과학분야인 식물,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의 정착과 생물종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확산,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열악한 국립수목원의 정보화를 통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수목원, 식물원, 대학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어업정보화 촉진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어촌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지방청,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총 56, 851명의 어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나 농촌에 비하여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촌지역을 위해 어촌정보사랑방운영사업을 2004년까지 393개소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어업인정보화 교육은 그동안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정보사랑방운영사업은 2010년까지 850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단문자서비스(SMS)확대, 어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등 어업부문을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수산물은 복잡 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5,300백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73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11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3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97개 일선수협중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25개 조합의 유통정보화 추진하여 동 5개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해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500여개 어가의 입점이 완료되어 시스템구축사업은 준공되었으며 향후에는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 대책

(1) 농식품수출 현황

농식품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훼, 채소, 과실류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라고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 최근년도의 수출동향 >

(단위 : 백만불,%)

	1997	2003	2004	증감률(%)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1,859.8	2,085.0	12.1
○ 신선 농림축산물	615.7	507.5	549.7	8.3
- 김치	39.7	93.2	102.7	10.2
- 돼지고기	242.3	31.3	27.3	△12.7
- 채소	38.4	100.6	127.0	26.1
- 화훼	5.3	45.3	48.5	7.2
○ 가공 농림축산물	1,143.5	1,352.3	1,535.3	13.5

한편, 수출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포장, 예냉검사 등 일관 수출체계를 갖추고 있는 광양·마산수출물류센타를 운영중이며, 아울러 수출농산물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재정비하여 수출농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 그간의 수출농업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1997년의 28개 단지에서 2005년말현재 126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2004년 93회에서 2005년 136회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2004년 256억원에서 2005년에는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2004년 3,779억원 수준이던 수출자금융자규모도 2005년에는 3,395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5개국 8개 농업무역관(KATIC)과 19개국 35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 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개발 등의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사업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특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식품의 홍보 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제 및 수입검역 강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시장경쟁 심화 등 수출애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 건강식품으로의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수출지원 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2005
계	27,521	35,300	36,164	35,415	39,655	41,617
□ 농산물해외시장개척	8,440	9,345	9,559	9,994	10,773	12,735
○ 국제농산물박람회	3,011	3,108	3,542	4,098	3,953	4,105
○ 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	853	1,025	879	1,100	1,045	1,300
○ 현지유통업체직수출	346	697	947	1,000	1,430	1,200
○ 수 출 홍 보 사 업	3,429	3,458	3,250	2,755	3,195	4,780
○ 해외시장정보사업	801	1,057	941	1,041	1,150	1,350
□ 농축산물 판매촉진	19,081	25,955	26,605	25,421	28,882	28,882
(수 출 자 금 융 자)	(4,135억원)	(4,043억원)	(4,596억원)	(4,526억원)	(4,639억원)	(3,395억원)

* '05년 수출자금 융자는 수산물이 제외된 수치임.

2005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1,796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과실·화훼·김치 등의 신선농산물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목재류 등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

(단위 : 백만$, %)

구 분	1999	2000	2001	2003(A)	2004(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합계	1,679.8	1,531,9	1,579.9	1,859.8	2,085.0	12.1
○신선농림축산물	791.3	550.0	521.0	507.5	549.7	8.3
○가공농림축산물	888.5	981.9	1,058.9	1,352.3	1,535.3	13.5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05년에는 국내적으로 주요 수출 어종의 생산이 저조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주력수출시장인 일본의 수산물 소비 정체 및 환율하락, 유가 상승, 중국 수산물의 공세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에도 10억달러가 넘는 수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일본의 김 수입할당(IQ)제도 폐지 추진 등 국제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수산물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하여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수출증대를 도모하였다.

셋째,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코자 국내외에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수산물의 수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제고노력,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 우리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하여 시장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등의 개선을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하여 수산물 국제교역 촉진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 수입관리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등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농산물인 대두, 팥 등 13개 품목이다.

(2)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활용

(가) 할당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05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요소, 농약원제 등 23개 품목이다.

(나)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5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찐쌀, 바나나, 메주 등 7개 품목이며, 당면(50%→45), 메주(22%→20), 표고버섯(50%→45) 등은 축소 적용하였다.

(다)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5년 11월말 현재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은 녹두, 팥, 대두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라)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TSG)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3)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22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단속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40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대농산물의 면세 한도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80kg→50, 2000.10), 2002년 1월부터 품목별 반입한도량(5kg, 잣 1kg, 쇠고기 10kg, 한약재 3kg)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휴대품 통관고시를 개정하여 반입물량 축소 및 반송절차를 강화하였다.

(4)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저가의 외국산 수산물 특히 중국산 수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어업인 보호 및 수산업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첫째,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가 및 저질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돔, 새우젓, 활뱀장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종량세(선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WTO/DDA 및 FTA협상 등에서 무세화 또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가 논의 중이고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조정관세 철폐,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등 조정관세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수산자원의 부존상태에 따라 국내 생산량 등과 연계하여 국내생산실적, 수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물량까지는 저율의 관세 부과, 일정기준 이상 수입량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수입을 관리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셋째,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한해서 수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산 불량수산물의 수입이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산 활수생동물의 국내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12월「한·중 활어위생약정」을 체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활어에 대해서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산 수입 활어에 대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활수생동물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넷째, 어류질병 감염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낚시터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통관전에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함은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제도 강화차원에서 2005년 1월부터는 선도보장이 가능한 냉동품, 염장품, 건제품 등은 정밀검사후 통관토록 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당국가·해당품목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검

사를 강화하고 선통관을 금지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0월부터는 횟감용 수산물에 대하여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 및 불법 위장수산물의 수입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친환경농업의 육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개방화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교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중을 10% 수준까지 올리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2월에는 친환경농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키토산·목초액·천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천농가의 자재구입부담을 완화하였으며, 7월1일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조를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와함께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모델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2005년 9월에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여 경종농업과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연계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 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기술 등의 보급과 함께 생물농약 등 독성이 낮은 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작물별로 농약사용량 추세를 보면 벼농사는 농약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으나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농약사용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원예작물 재배에 천적방제를 정착시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약살포 노동력 절감 및 농약피해 방지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에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천적방제는 2013년까지 시설원예작물 전체 재배면적의 20%수준인 20천ha를 지원하고 정책파급효과를 통한 농가자체방제를 포함하여 50%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원예작물 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4개품목 300ha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상품목을 7개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면적도 1,000ha로 늘려 73억원을 투자토록 하고 이중 38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천적방제 체제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수출과정에서 농약잔류기준 초과로 반품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1999년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따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7.1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비・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 해 나아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38개소, '04년말)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들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04, 800개소 → '05계획, 679개소) 하였다.

또한, 2004.4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내 식량정책국과 축산국,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을 차관보 직속으로 구성·운영('05.9)하고 있으며 이 팀에서는 앞으로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경지로 환원시킴으로써 지력을 북돋우는 자연순환형 농업 형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4년말 현재 2,405천대로서 이 중 약 0.5%인 12천대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30%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봄·가을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의 적기 영농실현 및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봉사시 시장·군수 책임하에 무단방치된 폐농기계를 집중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 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약빈병과 폐비닐은 2003년의 경우 각각 59백만개, 257천여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환경부 산하 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수거해오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각각 56%, 63%수준으로 낮아 이로인해 농촌환경이 오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 부터 수거되는 폐비닐 년간 85천톤에 대하여 전액 보조로 매년 정액지원(30원/kg)을 하고 있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이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과다 의존하여 농작물이 재배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천·호수의 부영양

화, 축산분뇨 등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토록 개선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2)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시설과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고 연2~4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1998년에 200지점, 1999년에 350지점, 2000년에 450지점, 2001~2004년에는 500지점을 선정·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질조사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한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1999년에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이 중 3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완료하였다. 2001~2003년에 전남 무안군 감돈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준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평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2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와 1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추진중에 있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주변의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에서 10농가 10ha이상의 집단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토착미생물 배양·증식 및 유기자원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퇴비제조시설,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04년말 까지 679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05년에는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하여 63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읍·면당 1개소를 목표로 총 1,5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광역화된 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시·군단위 환경민감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산과 경종이 연계하는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3년까지 시·군당 1,000ha정도의 단지를 총 50개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에 3개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150억원(2007년 150억원 별도)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추진결과 등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5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사업추진 모형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 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400ha을 대상으로 매년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274ha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459ha을 대상으로 30억원, 2004년에는 12,827ha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1,887ha에 대하여 10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논의 경우에는 밭과는 달리 2005년까지는 논농업직접지불금에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 부터는 논과 밭으로 분리된 직불사업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하고 논에 지급하는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즉, 논 저농약의 경우 ha당 217천원을 신규지급하고, 논 무농약은 150천원에서 307천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며, 논 유기의 경우에는 270천원에서 392천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예산을 1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수매자금 지원, 품질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전문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수매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40억원을 지원하고 2006년에는 직거래자금 이외에 유통활성화자금 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 11월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을 통한 TV광고를 3개월간 방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안정

(1)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과거 시장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효과가 크고 생산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연차

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하여 현재 8종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표참조). 농업구조조정이 끝난 선진국과 달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개방피해에 대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병행하여 추진해야하는 우리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EU 70%, 미국 36%, 일본 13%, 01년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차적으로 직불제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농업투융자재정의 23%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2) 2005년도 추진현황

2005년 직불제 예산은 8,638억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11.9%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종전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각각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하고 양자를 쌀소득등보존직불제로 통합하였다. 개편과정에서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 4ha면적 제한과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부담금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식재·관리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도입하였다. 지원단가는 170만원/ha이며, 사업예산은 6억원이다. '04년에 시범도입한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모니터링과 사업홍보 등 시범사업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3) 향후 추진 계획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에 의거 앞으로 20013년까지 직불제 예산을 24조원 수준(농업재정의 23%)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6년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현행 60만원/ha)하여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본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과 밭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업등록농가 900호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계속하며,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제

는 단가는 '05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청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량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09년)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직불제 신청서식의 통일적 전산화를 추진(1차사업 '05~'07년)하고, 직불제의 일관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운영기관의 설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

구 분	경영이양 (1997)	친환경농업 (199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2005) *	
			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
목 적	· 영농규모화 촉진 · 은퇴농업인 소득 안정	· 환경보전	·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대 상	· 63세이상 72세이하 경영이양하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실경작자	· 실경작자
사 업 규 모	8.3천ha	11,385ha,	998천ha	998천ha
대 상 농 가	2.1천농가	6천농가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
요 건	· 경영농지 매도시 · 5년이상 장기임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 비료·농약 적정 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질 경우
단 가	- 매도289.6만원/ha (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분할지급) · 임대:297.7만원/ha	· 79.4~52.4만원/ha · 지급 0.1~5ha	· 60만원/ha(진흥·비진흥 평균)	·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차액의 85%
'05예산	286억원	69억원	5,988억원	1,376억원

* 논농업직불제는 고정직접지불금, 쌀소득보전사업은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변경

구 분	쌀생산조정제 (2003)	친환경축산직불 (2004)	조건불리지역 (2004)	경관보전직불 (2005)
목 적	· 생산감축을 통한 쌀수급균형 도모 · 쌀 재협상시 입지 강화	·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 지역사회 공동화 방지	·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유지·도시민의 여가 수요 부응 및 농촌지역 사회 활성화
대 상	· 실경작 농업인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농가	· 오지면중 구분지표를 적용 선정한 법정리 거주 실경작자	· 독특한 지형을 나타내는 농경지 및 전통적 특성이 남아 있는 농촌마을
사 업 규 모	26천ha	· 한우 200호, 젖소 300, 돼지 400, 닭 100	32천ha	470ha
대 상 농 가	76천농가	900농가	35천농가	-
요 건	· 약정체결 농지에 3년간 벼,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	·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이행기록장부 기장, 발생분뇨 환원	· 마을협약 체결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 마을별로 경관보전 계획을 수립,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준수
단 가	· 300만원/ha	· 기본 : 1,300만원/호 한도 · 인센티브 : 200만원/호 한도	· 밭 40만원/ha · 초지 20만원/ha	· 170만원/ha
'05예산	791억원	58억원	123억원	6억원

(4) 수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가) 배경 및 추진경위

수산분야의 보조금폐지와 관세인하를 포함하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가 2001년 11월 출범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자원관리 및 환경친화적 어업 육성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나) 시행준비 및 시행과정

농업은 1994년 UR협상 타결이후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1년부터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농업과는 달리 직불제 도입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농업분야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선분야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타당성과 우선시행분야 선정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KMI)에서 수행하였으며, 2004년도 처음으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방지를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직불제(50억원)를 시범실시하여 양식어장 148ha를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282ha를 지원하는 등 2008년까지 총 1,15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사용량(1,553ha)의 80%(1,243ha)까지 확대 전환할 계획이다.

(다) 앞으로 남은 과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업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과잉 어획노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업자원관리방안으로 휴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휴어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설계와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입가능한 다른 직불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나.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주5일 근무제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의 정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관광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도 농촌관광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이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4년 32개 마을에서 2005년에는 47개 마을로 확대 조성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는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촌1인 전문가 컨설팅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농촌체험 활동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마을 수는 2004년 10개마을에서 2005년에는 20개 마을로 증가하였다. 관련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동기화(입문)과정, 리더십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등 4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은 2004년도 1,000명에서 2005년도에는 1,300명으로 확대되었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산어촌체험박람회,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 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1사1촌운동은 2004년부터 농협과 기업·단체 등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운동이다. 2005년 11월까지 8,278건의 1사1촌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연인원 674천명이 참여하여 310억원의 교류실적을 보이는 등 짧

은 기간내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사1촌운동의 개념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를 포함하여 농협, 농업기반공사,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중에 있다.

농산어촌체험 박람회는 2005.4.27~5.1 기간중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박람회는 관람 인원이 당초 목표 50천명을 초과한 68천명이 다녀가는 등 도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농산어촌체험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흥미있는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농업·농촌 문화와 가치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도농상생 공감대 확산의 기폭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간·지역간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농촌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7~8월 두 달 동안 농림어업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도시민과 체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민의 77%가 농촌휴가에 만족하고, 재방문의사를 표명하였다. 체험마을의 81%는 전년보다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7~8월중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은 전년보다 22% 수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캠페인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촌마을은 숙박비를 과다요구하고 있으며, 침구류·화장실 등의 청결성이 부족하고, 체험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함과 동시에 농촌마을 주민들의 도시민 수용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나의 농촌문화체험기'를 공모하는 한편, 도시·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교환 방문하여 문화체험 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토록 도농생활체험캠프를 운영하였다.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

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을 시상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였다. 농어촌민박의 범위를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박의 기준이 되는 규모를 당초 객실 7실 기준에서 150㎡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3㎡이하의 주말주택 및 마을공동농촌체험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가칭)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2)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휴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1990~19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5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 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추진

하여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2005년도에는 다양한 해양생태와 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어 발전 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어촌·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5.3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2호, 12.1)을 제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8개소/22억원)을 완료함으로서 관광 인프라 구축의 사업 착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체험 중심의 21세기형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충남 태안군 만대마을 등 18개소에 11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도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운영하게 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 있는 선진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를 어촌사랑의 원년으로 정하고 100사 100촌 자매결연 행사를 계기로 해양수산가족 화합 도모 및 도시와 어촌의 교류 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14개의 어촌계가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이후 전경련 등 대기업, 아파트 부녀회 등 자매결연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2005년에는 32개소에 472억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공단지에 특산물 가공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술경영지도, 판로확보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

구분	추진목표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사업량(개 소)	400	305	32(9)	86
사업비(국고,억원)	7,572	5,905	472	1,195

주 : ( )는 완공지구

(4)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2004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546개소, 특산단지 642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4년에 6,805억원을 기록하여 IMF직후인 1998년의 5,723억원에 비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과 특산품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와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향토성과 지역지명도를 상품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다.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가)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기금설치 · 운용을 위한 관계법령 제 · 개정

2004년 제도개선 T/F로 결정된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공포(2005.1.27)하고, 동법시행령을 개정(2005.5.13) 하였으며,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평가요령을 새롭게 개정(2005.5.24)하였다. 또한, 재보험기금의 운용을 위한 운용조직을 구성(2005.4.1)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2005.6.4)을 제정하였다.

(나) '05년 보험사업추진 및 국가재보험 약정체결

2005년도에는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그동안 손해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제해왔던 보험요율을 보험원리에 따라 현실화 함으로써 인상된 농가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순보험료의 61.2%를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도 24,866농가보다 11.8% 증가한 27,805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17,546ha)도 15.9% 증가한 20,330ha을 보험에 가입(가입률 대비 23.4%) 하였다.

< '05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

(05.3.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증감(%)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24,866	27,805	2,939(11.8%)
	가입면적(ha)	17,546	20,330	2,784(15.9%)
	가입률(%)	18.2	23.4	5.2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50	61.2	11.2
	운영비(%)	90	100	10
	국고지원액	37,803	52,761	14,958(39.6%)

*주1) 기금출연금 300억원 별도

또한,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2002년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던 삼성·현대·동부 등 민영보험사의 재참여를 유도하여 2005년6월 재보험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사업안정기반을 구축하였다..

※ '05년 국가재보험제도 주요 약정내용

- 거대재해(손해율180%초과손해) : 국가가 전액부담
- 통상재해(손해율180%이하손해) : 농협 등 민영재보험자 부담
  · 참여민보사(인수율) : 삼성,동부(24%),현대(16),코리안리(8),LG,동양(1.5)

(다)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2차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2005년도에는 농업인·기획예산처·보험개발원·민간보험사 등 보험전문가들로 제2기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국가재보험제도 등 보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등 앞으로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다.

또한, 수도작(벼) 도상연습 시행방안 등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2005. 6~2005. 12)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보험화 가능한 품목부터 연차적으로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가축공제, 농업인안정공제 등 유사사업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농작물 전반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2)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점차적으로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고 지원예산도 2004년 대비 45.1% 증가한 2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축공제 가입률 >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P)
소	7.0	7.2	7.6
돼 지	43.4	49.9	55.1
말	2.1	1.9	2.5
닭	17.4	22.3	23.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2005년에는 공제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닭・오리의 가금공제에 꿩・메추리를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가축공제상품 다양화 등 가축공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2005.5월~2006.2월)이다.

(3) 농가부채 경감대책

(가)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기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7.2)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10.31 국회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 지원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3.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부채대책 내용

< 2004 농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①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수준 → 1.5%) 및 상환기간연장(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② 2001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③ 2001대책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④ 2001대책으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상환기간연장(3년거치 7년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⑤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5%, 7조원)
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연이율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04지원 2,000억원, '05지원 3,000억원)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20%)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당시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30%)

(다) 부채대책 추진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부채경감대책 중 농업인의 신청이 필요없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2001지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2004.3.5일자로 일괄 조치하였으며, 시행초기에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농업전문지에 광고게재, 조합별 프랑카드 게시, 리후렛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6,000부) 부착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신청기한을 당초 2004년5월31일까지에서 2004년12월20일까지(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신청은 2004.12.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일선 현지점검,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5월29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지침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총부채 1억원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초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이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3개 읍·면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004년 9월 30일에는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추가 지원과 관련 그동안 신청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채경감대책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2003말 대출잔액~1999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

던 농업인은 2000~2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 까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하였다.

농업경경회생자금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를 전업농 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에서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000만원이상인 농업인에서 2,5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농업인 신청일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에서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향후 1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에서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2.1.1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에서 2001.1.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심사·지원이 이뤄지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04년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에 따른 부채경감대책자금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당초 대출기간은 2005년8월31일까지였으나 농민단체, 대출취급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에게 한하여 2005년10월31일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였다. 농가부채대책 지원자로 선정된 농업인중 기존의 연체자금해소 및 각종 서류 미비로 인해 2005년8월말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2005. 9. 30일 현재) >

(단위 : 천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신청 현황		지 원 결정액	지원액 (C)	비율(%)	
	(A)	건수	금액(B)			(B/A)	(C/B)
정책자금 상환연기	80,409	422	79,801	47,802	40,106	99.2	50.3
2004상호금융대체자금	66,500	513	73,731	45,335	37,894	110.9	51.4
연대보증해소자금상환연장	4,526	14	3,303	2,938	2,057	73.0	62.3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5	1,987	1,910	1,635	99.4	82.3
계	153,435	954	158,822	97,985	81,692	103.5	51.4

(4)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1998년 이후 대형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 학계, 임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표준 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5)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WTO-DDA체제, FTA체결 및 산업화에 따른 어업자원의 감소 등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여건변화로 어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5년은 국제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여타산업에 비해 유류 의존도가 높은 어선어업의 경우 유가로 인해 출어포기 등 생산활동 위축으로 연계되고 어업경비 증가는 경영 적자 또는 경상이익이 대폭 감소되는 등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어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04. 3. 5 개정·시행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4년에 신청받은 "2003년 말 현재 대출받아 사용 중인 대출기간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은 새로이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2001년 지원된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은 당초 지원일로부터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하며, "2000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신규 대출받은 어업용 상호금융 일반자금(연 8.5%)은 연 5.0%, 5년 후 상환"토록 하는 2004년 부채경감대책의 대출실행 기한을 4차례나 연기하여 2005년 10월말에 마감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정책자금 2,415억원과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71억원이 각각 장기간으로 연장되었고, 2,156억원의 상호금융자금이 저리로 전환·지원하여 어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은 물론 상환부담을 덜어주었다.

한편, 태·폭풍 등 자연재해, 적조 및 어·패류 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수산경영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수산업경영회생자금 200억원(연 3.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과 어업경영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영어자금 1조 4,050억원 및 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된 부채대책자금 9,618억원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른 2005년도 1,080억원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6)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도입

(가)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2004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초년도로서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유가인상 등에 따른 출어경비의 증가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소형어선의 보험가입율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시행 초년도 발생한 제도적인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톤급에 따라 2.0~4.5% 확대되어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부담액은 경감되었다.

(나)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태풍과 적조 등의 어업재해가 발생시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종묘대금 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산물양식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양식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어업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후 “(가칭)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일부어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가. 추진배경

기존의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12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기본 정책방향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내 산·학·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개소당 평균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클러스터 정책과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200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사업추진방안 수립

'04.2.23「농업·농촌 종합대책」수립시 농정추진 및 지원체계 개편과 지역농업발전전략을 포함하고, '04.3.8「대통령 업무보고」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고하였다.

'04.5.25~10.31「지역농업클러스터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초청토론회, 현장사례조사, 지역농업 활성화 워크숍, 지방농정과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05.1.4「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05.1.18「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 시범사업 추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한 후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에 총 63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광역지자체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농림부에 총 28개의 사업을 신청하였다.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유형별 현황 >

구 분		주도적 혁신주체 구분				특성화 정도 구분		
		대학·연구소	생산자단체	관련기업	지자체	생산·유통	가공	테마
기초	단수(13)	영동포도, 풍기인삼 (2)	안성마춤 (1)	포천한과 (1)	괴산고추,아산친환경,서천모시,장수사과,정읍순환농업,임실치즈,보성녹차,함평과학농업,하동녹차 (9)	안성마춤,괴산고추,장수사과,임실치즈,보성녹차,풍기인삼 (6)	포천한과,영동포도,서천모시,함평과학농업,하동녹차 (5)	아산친환경, 정읍순환농업 (2)
	복수(5)	경남양돈 (1)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 (4)			강원한우,백두대간,전남쌀,경남쌀,경남양돈(5)		
	소계(18)	3	5	1	9	11	5	2
광역(2)		경북한우 (1)			제주감귤(1)	경북한우, 제주감귤 (2)		
합계(20)		4	5	1	10	13	5	2

이에 농림부는 사업부서의 사업성 심사, 실무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및 현지심사,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특색있고 다양한 유형의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발표<표 3-2-13>한 후 각 사업단별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2005년도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각 사업단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3년간의 농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림부는 시범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이외에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통시설 지원 등 기존의 다른 농림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20개 시범사업단간 지식과 기술 등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단 총

괄책임자협의회」와 사업단의 현안 및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주체(리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라. 향후 추진계획

(1) 지속적인 현장애로 해결 및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외부의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클러스터 사업추진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2) 중장기 농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수립 추진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연구용역 결과 및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토대로 본 사업의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 및 전국적인 농산업클러스터 지도 작성 등 중장기적인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Ⅳ.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대책 추진 ····· 143

2. 채소·원예산업 ····· 149

3. 축산업 ····· 154

4. 임　업 ····· 170

5. 수산업 ····· 197

Ⅳ.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대책 추진

가. 양정제도 개편

WTO출범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농업협상 이후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DDA·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가 전환하였다.

또한,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등의 보전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05.7.1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쌀 판별능력이 부족한 점과 밥쌀용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양곡표시제도 강화 등 시장관리를 통해 고품질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였다.

나. 수급전망 및 정책방향

'05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대북지원(국내산 278만석), 특별재고처리(주정용) 등으

로 '04년말보다 약 48만석 감소한 672만석 수준('04 : 720만석)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급과잉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04년 쌀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05년 225천톤에서 '14년 408천톤 까지 증량되고. 그 중 소비자시판은 '05년 TRQ의 10%에서 '14년까지 30%로 증가되어 시장개방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가 양정제도 개편 첫해임을 감안 농업인의 수확기 벼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확기 시장안정대책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00만석 많은 400만석으로 확대하고 비축물량외 100만석 추가매입·격리조치, ② 2006년 정부 일반공매 지양공표, ③ 2004년산 지역농협 재고(63만석) 시장으로부터 격리 및 재고축소(당초 재고계획 1,060만석→672만석으로 축소) ④ 공공비축 물량중 산물벼 또는 포대벼를 농가희망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 쌀 재고증가 등의 국내 수급여건 변화와 대외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당면한 미곡유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추진할 계획이다.

<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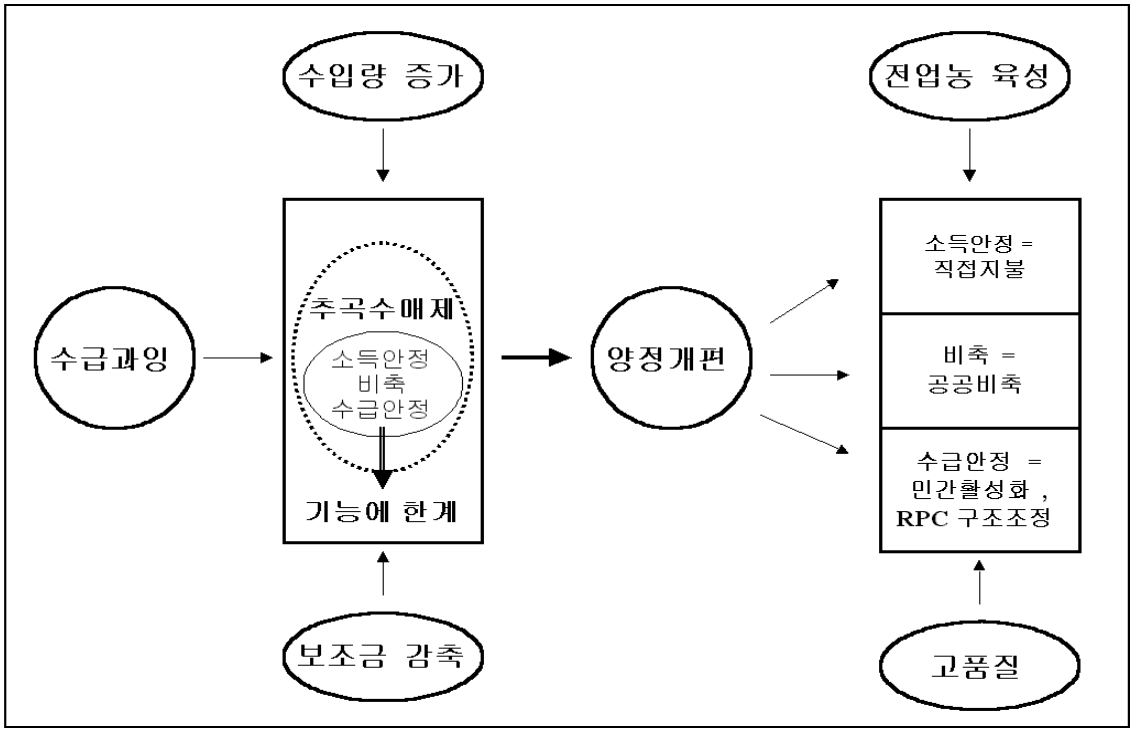
◇ **앞으로**는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4년말까지 총 8,432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639개소를 설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입품종을 3개 품종 이내로 일괄 예시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RPC의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여 민간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촉진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쌀은 고품질 품종보급 미흡, 재배법의 미정착,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 미흡 등으로 대외 품질,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아직 외국의 고품질 쌀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road map을 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와「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고품질쌀생산팀 등 6개반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쌀 품질고급화 6대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쌀소비 촉진 전개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재고량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쌀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소비촉진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명축구선구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러브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CF 공익광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미광고로 젊은층과 주부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미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미 홍보는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3년부터는 러브미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농촌체험캠프 실시 등 단기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3년에 처음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쌀 평가는 쌀의 인지도,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5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주요미질 구성요소인 품위·품종혼합율·식미 등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패널에 의한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켰다.

2004년에는 시·도, 곡협, RPC협회 등에서 6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품위 및 식미는 수확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2003년도보다 다소 떨어졌으나, 품종혼합율 및 소비자만족도는 전년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12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12개 우수브랜드>

① 황금빛노을쌀(충남) ② 달마지쌀(전남) ③ 함초로미(전북)
④ 한눈에반한쌀(전남) ⑤ 김포금쌀(경기) ⑥ 5℃이온쌀(경남)
⑦ 임금님표골드(경기) ⑧ 아산맑은쌀(충남) ⑨ 동강드림생미(전남)
⑨새만금쌀(전북) ⑪ 참진쌀(경북) ⑫ 참숯과키토산으로재배한쌀(전북)

또한 우리쌀 서포터즈 농촌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농촌현장쌀 체험캠프는 대학생 중심 리더 캠프와 초중생중심 가족캠프로 구분하여 전국 5개권역별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실시하였으며 농민초청강의, 쌀포스터·허수아비만들기, 영농체험, 가마솥밥짓기, 러브미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지역단위로 특색있는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 홍보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MBC 추석특집·SBS 쌀의혁명 특집방송·KBS "UN쌀의해"관련 설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등 TV를 통한 방송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가단체에 의해 한국인의 식미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지역별 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높은 우수농가를 발굴,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가) 노지채소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행 초 무·배추 품목에서 2004년까지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 10% 수준의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3년 까지 23%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운용해 오던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개방화시대에 맞는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일부 조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고,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0,961호 및 모니터 요원을 1,11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 : 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 초년도 2개 품목이던 것이 2005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시설채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2004년 127백만불로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예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설원예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순회 지도로 시설원예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10여종의 온실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수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에는 토마토, 풋고추를 추가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5년도 자금규모는 2,222억원이다.

(2) 과 수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기반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실판매촉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판매촉진행사의 확대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과 대만의 WTO가입에 따른 수입규제 완화로 2002년 신선과실류 수출이 전년보다 85% 증가한 5,938만$(38.5천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수출협의회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해소 등 수출확대 기조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수산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총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으로 정체 내지 감소세로 반전하고 있으며, 과수농가 247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7.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과수는 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나 농가간 재배기술 수준의 편차가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과 한·칠레 FTA, DDA 등 개방에 대비하여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적 영농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이 고품질 생산을 주도하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 및 자율수급조절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7년간 조성될 FTA기금 1조 2천억원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지원하고 고품질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핵심 생산자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품목별 조직화가 촉진되도록 개별농가 단위의 분산지원 보다는 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첫째,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농협 육성과 품목연합회 활성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추진하고,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시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의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동마케팅 등 유통조직화를 통하여 현대화된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품목조직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체계 정착을 위해 품목조직 자율의 유통협약과 명령제를 적극 지원하고, 자조금과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및 출하조절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안전 생산을 뒷받침할 시설 및 기술을 보급한다.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하도록 키낮은 사과원, 포도 비가림, 참다래 방풍시설, 관배수시설 등 품목별 핵심 고품질 생산시설에 중점지원하고, 품질보증 우량규격묘목의 생산 및 유통체계가 정착되도록 묘포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 품목별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할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를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수출체계를 정착시킨다.

전문 수출단지 50개소의 생산과 출하 기반을 정비하고 물량보다 품질위주의 고가전략으로 수출국 주류시장을 개척하며, 동 단지에 대하여 수출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최적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을 육성한다.

한·칠레 FTA발효로 관세가 철폐될 시설포도·복숭아·키위 재배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폐업을 지원하고,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적정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모화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선도농가에는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재배보험을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화 훼

일관 생산·선별·수송·수출이 가능하도록 집단화된 화훼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생산·출하 등을 자율 조절토록 유도하고 있다.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품질 품종개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축 산 업

가. 한우산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및 품질고급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우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한우의 우수성 홍보과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하였다.

(1)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 114천농가, 619천두가 가입하여 전체 가임암소 사육두수의 약 9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 등의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하고자 2002년부터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7개소에 2,35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를 위하여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음파 단층촬영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거세확대를 통한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2000년 지원한 거세장려금(20만원/두)은 2003년 6월까지만 지급하고 2004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거세우를 대상으로 10~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 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프로그램으로 고품질의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3) 소비홍보 및 산지소값 안정대책

국내산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우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여 5월 1일부터 자조금 거출을 개시하였으며,

거출된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TV 공익광고 제작·방영, 114안내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산지소값 하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송아지 입식자제를 위한 대농가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12월 7일 전국 한우지도자 대회시 산지 소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교육하는 등 소값 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나. 낙농산업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원유 생산 쿼터제 정착과 소비촉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1) 사육여건 및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생산비가 1997년 507원/kg에서 2004년 495원/kg으로 0.2% 줄어들었으며, 사양관리 개선과 젖소개량 등을 통해 2004년 두당 산유량은 7,888kg으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하였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우유수급안정 추진

원유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원유 생산 쿼터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226만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2만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5, 가공시유 26, 유제품 31)하고, 나머지 34만톤은 분유로 가공하여 전년도 보다 잉여량이 5.5% 감소하였으며, 낙농진흥회의 경우 61만톤을 집유하여 49만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톤은 용도별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잉여량이 전년도 보다 40% 급감하였다.

집유일원화를 통한 수급조절 효율화를 위해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였으나, 집유일원화율이 27%에 불과하고 가공·판매 기능이 없어 유업체 계약량 이외 잉여량을 정부재정에 의해 단순 처리하는 등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집유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발전 중장기대책 방안을 농업·농촌발전대책에 반영('04.2.23)하였다.

생산자, 유업체대표 및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집유체계 직결전환 및 기준원유량 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집유체계 직결전환, 기준원유량 조정 등 낙농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낙농산업 중장기대책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에 원유가격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자측과 유업체측의 합의에 의해 원유 기본가격을 13% 인상('04.9.14)함으로써 최초로 민간 자율에 의해 원유 가격을 조정하였다.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 목장, 3대 가족소풍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인터넷을 통한 우유 테마송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과서 반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사용 학습지도서를 개발하였으며, 국산 유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면역활성 발효유 개발 등 6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기술교육을 3개교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도 단위의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본부 구성·운영, 깨끗한 목장 관리지침 제정·운영 등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산 시유와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우유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양돈산업

생산여건이 어려워 짐에 따라 국내산 공급이 감소하여 '04년에 이어 '05년에도 고돈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양돈 의무 자조금 정착과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5년 9월 현재 899만두로 작년 동기 905만두에 비해 0.6% 감소하였으며, 양돈 농가수는 전년동기의 13천 농가보다 8.3% 감소한 12천 농가로 규모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산지가격은 지난 5년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및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와 돼지 호흡기질병(PMWS)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인하여 2004년 이후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개방('97) 이전에는 수매비축 및 방출을 통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였으나 수입개방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안정 대책 추진이 어려우므로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사업과 자율수급조절 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사업, 조사 및 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 사업을 통해서는 국내산, 위생 및 안전성, 저지방부위(등·안심, 후지등)를 컨셉으로 TV홍보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출 추진

구제역('00,'02) 및 콜레라('03, '04)가 발생하여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구제역, 콜레라등 질병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한 열처리 가공품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2005년 7월 일본과 위생조건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일본의 위생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이 소요되어 수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나, 향후 국내 돈가가 예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열처리 가공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동남아와 러시아 지역으로 지방, 간 등의 부산물과 저급품의 지육(도태모돈)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라. 양계산업

2005년 9월 양계 3만수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1,700호로 전체 사육농가 14만호 대비 1.2% 수준이나 사육두수 점유율은 74%로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1) 닭고기 수출입동향 및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2004년도 닭고기 소비량은 32만톤으로 이중 수입량이 3만2천톤으로 자급율은 90% 수준으로 '03년 76%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1997년 7월 1일에 냉동닭고기의 경우 관세 30.5%로 수입개방된 이후 매년 관세 감축과 함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미국, 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로 전년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05.5월 이후 수입재개 등으로 '05.10월 현재 닭고기 수입량은 5만톤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03년말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04년 닭고기 수출량은 735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05.3월 대일 수출재개로 '05.10월 현재 수출량은 1,892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한 '03년(1,921톤)보다 닭고기 수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도 대형닭(수출규격) 생산시설 지원 및 컨설팅, 해외 닭고기 시장

조사, 가축전염병 예방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식품박람회 참가, 할인판매 행사 및 대미 닭고기 수출협상 등 해외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2) 양계산업 안정대책 추진

생산자단체, 소비자, 농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지속 홍보하여 양계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양계분야 자조금을 활성화하여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종계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양계농가가 생산량을 예측하여 병아리 입식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양계수급 안정을 위해 종계 수입물량을 국내 수요와 연계시키도록 종계 수입업체간 자율적인 합의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계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경영개선 등 컨설팅지도 업무를 농협 컨설팅지원실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닭고기·계란 등급제를 점차 확대하여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유통체계로 발전시키고자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 LPC) 건설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였다.

2002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를 완공(이중 2개소는 부도로 인해 제3자가 인수 운영)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냉장·부분육 유통구조 및 유통단계 축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LPC의 도축가동율과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높은 위생수준 운영에 따른 설비(Utility) 유지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원료확보 경쟁에 따른 일반 도축장과의 도축수수료 경쟁심화 및 IMF 당시 건설비 증가액을 고금리 차입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료구매·판매망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04.10월부터 '05.2월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LPC 경영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에 LPC 건설자금 2년 순연조치 및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금을 차등지원(578억원, 상위등급 0%, 중위등급 3%)하였으며, 도축장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통폐합 자금 지원, HACCP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LPC 등 시설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구조 개선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식육점을 위해 브랜드 중심으로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육점을 정예화·현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3)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및 사업확대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를 2003년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005년도는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3년차로 당초 수수료단가(소 1,600원/두, 돼지 300원/두, 계란 0.5원/개)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DDA/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여건을 감안, 등급판정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2006년부터 수수료단가를 조정(소 2,000원/두, 돼지 400원/두, 계란 1원/개),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은 단계적으로 소·돼지·계란과 같이 등급판정 수수료를 2006년부터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답리작, 사료포 등 사료작물 재배에 중점지원하고, 총체보리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남는 논·밭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개선하였다.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볏짚의 암모니아 처리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으로 볏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이용기술교육으로 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효율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반추가축용 섬유질가공사료(조사료 위주)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섬유질 가공사료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93~'98년까지 131억원을 '99~'04까지 264억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05년에는 9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의 이용증대를 도모하였고, '06년에도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퇴비화·액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3년말 설치대상농가의 96.6%가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2,211개소에 39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지원하였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우수·분뇨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이다.

(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축분비료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액비저장조를 679기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분비료유통센터」 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가축분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06년부터는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여 액비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실한 시공과 축산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 등 여건변화에 맞게 환경친화형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설정·보급할 계획이다.

(4) 유기축산시범사업 실시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을 유기축산시범사업목장으로 지정(사업기간 2003~2005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축종별 유기축산 관련기술 개발 및 세부사양관리지침서를 마련함과 아울러 유기축산의 경제성 분석 및 적정 사육모델 등을 개발중이다.

(5)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과 가축단위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축산물의 판매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해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대폭 감축하고, 사료공장에 HACCP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도축장·축산물가공장 외에도 집유장·축산물 보관·운반·판매장에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도축장에 대한 HACCP 전면시행과 더불어 축산물 가공장·보관장·판매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의 소속직원들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사후감시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영업자의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Recall)제도를 활성화하고, 의무적으로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하며,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HACCP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구제역 방역은 매년 재발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국경 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공·항만 X-ray 검색,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휴대육류 집중검색·검역탐지견 배치강화 및 미신고자 범칙금 처분, 해외 여행객 신발소독, 수입건초 및 나포·피항어선 소독, 외국인 농업연수생 등 관리,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하였으며, 국내 방역은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구제역 예찰 모니터링 검사, 지역 예찰담당관 지정,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방역교육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제역은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이후 5개월만인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돼지콜레라를 조기차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10월말까지 총 6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동물성 원료를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위험축군에 대한 광우병 집중검사 및 검사물량을 확대(2003년 1,046건 → 2004년 2,200건) 해 나가는 한편,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

을 위하여 내년부터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 경기 양주를 마지막으로 7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총 19건(닭10, 오리 9)이 발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모든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3~10km)을 설정하여 동 지역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민・관・군 합동으로 추진하였고 2004년 5월 29일 경남 양산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었다.

정부는 구제역, 조류인푸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대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질병별 시기별 발생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방역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완료,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등 가축방역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폭주 등으로 현장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232명)해 나가고, 방역현장에서 절대 부족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방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관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정부는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DB화하여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 그동안의 추진경과

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2004.1월)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였다. 2004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23개 브랜드를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그 중 9개 브랜드를 참여 브랜드로 선정하고 30개 연계 사업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 각각 10개씩)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www.mtrace.net)를 개설하고 같은 해 10.1부터 생산단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차를 두고 도축・가공단계는 12.1부터, 판매단계는 2005.2.1부터, DNA동일성검사는 3.1부터 각각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전 단계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관기관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귀표・, 라벨프린터・귀표리더기 구입비, DNA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 : '04년 14억원 → '05년 4억원)하고, 참여업체 운영비 및 판매장 홍보용 터치스크린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2) 각종 전시회, 언론보도 등을 통한 사업홍보

동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 및 중앙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시범사업 시연회('05.3월), 국제혁신박람회('05.5월), 국제축산박람회('05.8월), 축산물브랜드전('05.10월)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농림부 혁신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05.8월)하기도 하였다.

(3) 시범사업 자체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체평가결과 긍정적인 면은 첫째,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둘째,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DNA 동일성검사 실시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셋째, 소비자,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는 안전한 이력관리 식품을 찾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별화된 식품을 생산하며,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력관리 식품을 취급함으로써 지정판매장(당초 10개

→ 11월말 현재 28개) 및 판매량의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 도출의 한계, 각종 정책사업 연계문제 등 미흡한점도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9개 브랜드 외에 추가로 5개 브랜드 및 3개 지역단위를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였고, 개체식별번호(귀표)를 이용하는 각종 정책사업간 정보의 연계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철저한 개체관리를 위한 귀표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개체식별번호체계 변경·귀표 디자인 개선 등 개선안을 수립하였고, 한우 유전자(DNA) DB 구축 및 검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동 과제를 산·한·연 핵심연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4. 임　　업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001년도까지는 지정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서만 융자지원을 해왔으나, 2002년도의 간이온실시설 및 관정시설과 2003년도의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등 우량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지원과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트랙터 등 장비 지원을 통하여 양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묘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량묘목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 도에서 우량종자를 직접 생산하여 묘목생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종자저장시설을 2004년부터 각 도에 시설하고 있다.

< 우량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계획 및 실적 >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이후	비고
관 정	82공	20	20	22	10	10	-	
간이온실	80동	16	14	17	9	9	15	
토양개량	341ha	-	96	98	62	51	34	
장비구입	47조	-	-	10	10	16	11	
종자저온 저장시설	8동	-	-	1	1	-	6	

※ 2005년까지 보조금액(국비) : 3,664백만원

특히, 검증된 산림용 종자사용으로 형질우량목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의 신규조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량활엽수 종자확보를 위하여 OECD에서 정하는 채종림 구비조건(OECD/CFRM)에 맞는 채종림을 확대 지정하여 정부에서 채취한 종자를 묘목생산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종자국가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또한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자 및 묘목의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량종자에 의한 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국제규범에 맞는 종자 및 묘목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山地)와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추진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나라 건설을 목표로 경제림 14천ha 및 생활권 주변에 5천ha의 큰나무, 경관조림 등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산림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숲의 특성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소득·경영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코자 ’05년부터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모델숲·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

자원육성과 병행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연관사업을 집중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코자 '06년부터 산림·산촌클러스터 사업을 신규사업(시범1, 기본설계5)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용재·소득수종 조림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면서 대면적 단일 수종의 획일적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조림대상지의 지형, 토질, 지세 등을 고려한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과 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수 조림, 활엽수 밀식조림, 용기묘 조림, 파종조림, 경관조림, 수원함양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나무를 벌채하고 대면적을 새로 심는 조림방법으로 조림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 됨에 따라 자연 복원력(움싹)을 이용하여 맹아갱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60~7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하였던 리기다소나무림이 벌기령이 지나 노쇠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만연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벌채하여 국산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리기다소나무림을 친환경적인 갱신방법으로 약용·특용 수종 및 산주가 원하는 소득수종으로 다양한 갱신을 추진코자 리기다소나무림 벌채·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림 단지 육성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62%를 차지하는 청년기 산림으로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우량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생장이 불량한 산림은 수종갱신을 통해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하고, 우량천연림은 적극적인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는 240만ha의 인공림을 조성하고, 우량활엽수림, 소나무, 참나무 등 천연림 110만ha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전국에 350만ha의 경제림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99년부터 추진해온 경제림육성단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에서 450개 단지 292만ha(국유림 : 105개 단지 58만ha, 민유림 : 345개 단지 234만ha)를 최종 확정하여 산림자원 조성·육성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GIS 수치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지자체, 지방청 등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기관의 관리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리기관별로 경제림육성단지 도면의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단지별, 관리기관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06년도 시범관리계획 수립 예산 252백만원을 반영하고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별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제림 육성단지 >

(단위 : ha)

구 분	계	국 유 림	민 유 림
단 지 수	450개소	105개소	345개소
면 적	292만ha	58만ha	234만ha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 내(1998~2004)에 추진한 숲가꾸기사업은 총 2,009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29%를 실행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산림자원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생태환

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00만ha의 숲을 가꾸는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

(단위 : 천ha)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54	175	210	227	234
공 익 림	300	38	51	65	72	74
경 제 림	500	76	84	105	115	120
방 재 림	200	40	40	40	40	40

2003년도에 수립한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과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림의 맑은 물 공급기능과 수자원 확대를 위해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종합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사업으로 댐유역 산림을 녹색댐으로 조성하여 수질·수량을 개선하고 토사유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공댐과 녹색댐의 기능을 상호 보완해 나가는 「녹색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변(서울~대전 간) 숲을 아름다운 경관림으로 조성하는 숲가꾸기를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숲가꾸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경영목적별로 숲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육

성해 나가며 간벌재 등의 수집비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이다.

숲가꾸기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설계·감리 제도를 '04년도 49개 시·군에서 94개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확대 추진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할 계획이며, '05.8.4.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여 법제화하였다.

아울러, 숲에 내재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현장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숲가꾸기 지원팀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토론회 실시 등 '숲가꾸기 현장대응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숲가꾸기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숲가꾸기 모니터링의 추진 등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2005년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의 전개로 10월 말 현재 44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평균 534건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산림피해는 2,036ha로 예년평균 6,583ha 대비 69%가 감소하였다.

건조한 기후가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불피해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일선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산불방지 노력과 함께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화장비 및 인력의 확충과 산불방지 협정제도를 통한 자원의 활용도 증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05년도(1.1～10.31) 산불상황 >

구 분	5년평균동기 (10.24일 까지)	2005년도 (2005.1.1～10.24)	5년평균대비 증(△)감
발 생 건 수(건)	534	441	△17%
피 해 면 적(ha)	6,583	2,036	△69%
건 당 피 해 면 적(ha)	12.3	4.6	△63%
건 당 진 화 소 요 시 간	2 : 08	2 : 04	△3%

금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민간인을 채용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3천명에서 4천명으로 확충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산불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3개 분야의 비예산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논·밭두렁 등 취약요인 사전제거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진화자원의 확충과 산불진화헬기의 주·야간 상시 정비체제 시행으로 헬기가동률을 높여 산불진화능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지구상의 약 60만여 종의 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2,500여종이며, 그 중에서 비교적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등 20여종이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97까지는 발생속도가 둔화 된 상태였으나 경남 함안, 진주지역으로 확산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확산 되어 현재는 전국 54개 시·군·구에 감염사실이 확인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공포('05.9.1.)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05.10.24)을 수립·시달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산림

조합,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솔잎혹파리는 1981년 299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계속 피해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96년 발생면적 209천ha 대비 현재는 29% 감소한 149천ha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04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심"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아직까지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해안 우량 해송림을 고사시켰으나 꾸준한 항공방제와 나무주사로 회복 추세 일로에 있으며, 1983년 솔껍질깍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96년에 가장 많이 발생(16천ha)하여 서남부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05년 현재는 12천ha가 발생하였다.

돌발해충은 겨울의 날씨 변화에 따라 발생 증감 폭의 변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강상태이며, 최근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잎벌 등 신규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 산림병해충 발생 >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발생면적	370,147	377,765	371,187	361,720	339,988	336,528	292,266	254,190	243,035	315,607
방제면적	254,451	280,586	240,449	248,233	270,042	262,823	240,161	205,010	181,471	159,447
투 자 액	46,445	58,518	50,033	50,085	57,400	46,878	46,152	42,175	33,038	52,354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산림 모암의 대부분이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연평균 강수량 약 1,300~1,500㎜의 60%가 여름 장마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조건과의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벌, 화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산림면적의 10%인 68만ha가 황폐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복구하여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 사방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1945년 해방 이후 2004년까지의 사방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방사업 실적(1945~2004) >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사방	해안침식지복구	야계사방	사방댐
727,319ha	471ha	3,748ha	35km	4,401km	1,546개소

한편, 최근에는 엘니뇨(El Niño)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의 사방사업 시공은 재해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주요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179개소, 야계사방 50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작년 시범실시 3개소에 이어 올해 5개소에 대하여 시공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05년도에 추진할 사방사업의 종류별 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 2004년 사방사업계획 >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침식지복구	야계사방	사 방 댐
100ha	30ha	9km	50km	179개소

※ 산림유역관리사업 5개소는 별도임

아울러 '04년부터 추진 중인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시행 예정지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연계시킨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재해예방업무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21세기는 생물다양성 보전시대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세계 각국은 지금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즉,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원을 얼마만큼 실용성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는가 등 지속가능한 이용의 영속성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곧 국가경쟁력의 평가로 이어지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산, 구릉지대, 깊은 계곡 등 복잡한 지형·지세와 4계절이 뚜렷한 기후대 등 자생식물의 생육조건이 다양하여 온대지역 국가 중 상대적으로 식물종이 풍부한 국가이다. 우리나라 식물자원 현황은 고등식물이 5,285종, 하등식물 3,609종으로 전체 식물자원은 8,894종이며, 고등식물 5,285종 중에서 목본·초본 등 관속식물이 4,594종, 선태류 등이 691종이며, 규조류, 편모조류, 담수녹조류, 윤조류, 해조류 등으로 구성된 하등식물이 3,609종이다.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2001. 3. 28)하고 이어서 식물종 다양성의 수집·보존·이용기반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등 수목원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수목원의 확충 및 육성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동 계획은 향후 5년간(2004~2008) 정부의 수목원 정책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수목원의 확충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며, 시·도지사와 국립수목원장은 본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수목원 본래의 기능 및 국민의 여가선용과 자연학습 공간으로서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새로운 수목원 문화의 창달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전·확보·이용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수목원 현황(2005현재) >

구 분	합 계	국 립	공 립	사 립	학 교
개소수(개)	43	1	19	17	6
비 율(%)	100	2	43	40	15

또한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국·공립 수목원 내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 산림박물관 건립 : (2002) 6개소 → (2005) 9개소 → (2008) 11개소

그리고 지구상에 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과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 식물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 등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태숲 조성 : (2002) 6개소 → (2005) 17개소 → (2008) 21개소

그 밖에도 생물자원에 대한 탐색·수집·이용 및 산업화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통적인 고유경관을 회복하고 우리 식물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민적인 관심제고 및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식물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꽃길조성 등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생식물 식재사업 추진 현황(16개 시·도) >

구 분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 업 량(km)	363	32	50	55	61	55	55	55
투자액(백만원)	25,927	2,286	3,572	3,928	4,357	3,928	3,928	3,928

(5) 5대강유역 산림 특별관리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우리나라는 연간 수자원 총량 1,267억톤 가운데 65%인 823억톤이 산림에서 공급되는 산원수(山源水)이며, 비 산림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은 35%인 444억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림에서 발원되는 하천수는 산림상태 여하에 따라 양과 질이 좌우됨으로 다량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의 녹색댐 기능제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면적의 산림유역 상류부는 활엽수 천연림이 분포하고, 중·하류부는 침엽수 인공림으로 분포되어 있어 상류부는 장벌기(長伐期) 사업을 통해 산림토양의 저류기능을 증진시키고, 하류부의 침엽수 인공림에 대해서는 가지치기와 간벌 등 집약적인 시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산림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단계별·연차별로 적극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5대강유역 수원함양산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2단계(2000~2007)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5대강 유역과 동강(강원 영월)유역의 수원함양림을 대상으로 15,368ha의 조림과 140,628ha의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하였다.

앞으로 5대강유역에는 활엽수 위주의 수원함양조림사업과 침엽수림에 대한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산림사업 실적 >

구 분	단위	계	조 림	육 림
○ 사업량	ha	155,996	15,368	140,628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004년말 현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분수림설정 현황은 14,507건 89,381㎡로서 그 허가 및 사후관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광업·골프장·스키장 등의 용도에 대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 및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지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사용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이 부실한 경우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는 확대하여 농·산촌 주민이 산촌개발사업이나 약초·산채·버섯재배 등의 용도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조림대부지(분수림설정 포함) 면적 69,711ha 중 경영여건 악화로 방치되고 있는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내 사유입목에 대한 벌채를 억제하고, 그 입목을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매수(2004년 12,063ha → 2005년 계획 9,000ha)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가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있다.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강구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 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도밀도가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도까지 총 사업비 810,24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2004년도 말 현재 임도 총 시설거리는 15,610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임도밀도는 2.4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2m/ha, 독일 44m/ha에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족한 임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품질” 유지보다는 “물량” 확대에 치중한 결과 장마철 집중호우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사면이 노출됨으로써 경관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과거 예산 단비에 맞추어 설계·시공하던 것을 1999년부터 산림상태, 토양특성 등 현지 산림여건에 따라 피해방지·경관유지 등 가능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하는 등 견실한 임도를 구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실적 >

(단위 : km)

구 분	1968 ~1996	1997 ~ 2003	2004	누 계
계	10,803	4,707	100	15,610
국 유 임 도	3,296	701	10	4,007
민 유 임 도	7,507	4,006	90	11,603
누 계	10,803	15,510	15,610	15,610
밀 도 (m / h a)	1.69	2.42	2.44	2.44

또한, 기존임도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임도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전개하여 미비사항을 보강함으로써 경관 저해 및 피해발생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당분간 신설은 최대한 줄이고, 구조개량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신설사업비의 70% 이상을 구조개량사업비로 전환하여 보강이 시급한 임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량해 왔으며,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2008년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임도 노선선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동안의 임도는 장기계획에 관한 법령 근거가 없이 매년 임도 노선을 선정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산림법령을 개정하여 “간선임도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임도 노선 선정기준” 및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 법제화하였다.

또한, 현재 임도를 설치할 때 총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산주가 임도 설치를 기피함으로써 임도 설치에 애로가 많아 영세 산주 지원 차원에서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개정하는 등 임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자연에 조화롭고 견고한 임도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2)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계화는 임업노동인력 부족 및 산림 사업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지형에 맞도록 기계·장비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기계톱, 예불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장비의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적용이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용으로 도입하여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있는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산주 등에 고가의 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전국에 권역별로 10개소의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능인영림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까지 6,304명을 조직(국유림 1,816명, 민유림 4,488명)하였으며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1997년에는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영림단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에는 기능인영림단 조직과 관련된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산림사업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을 계속하여 확대 육성할 계획이며, 연중 작업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직업정착을 위한 생계보장 및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 3조 2,590억원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1조 8,328억원으로서 임산물 총생산액의 56%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매년 80백만$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경우는 우수품종 개발 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밤생산장비 지원,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산단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산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산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15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7개 단지에 대하여 산약초 등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2개 단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품 유도 및 생산자별 고유 브랜드화 추진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우리나라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62%를 점유하고 있어 아직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임에 따라 국내 목재소요량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간벌・소경재가 대부분으로 재질 및 제재수율이 수입 대경재에 비하여 낮고 휨,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이용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목재 자급률 향상과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하여 1993년도부터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목재이용가공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목재유통센터와 동해사업소를 각각 1997와 2004년도에 설치하여 국산재 이용 및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말까지 8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주 소득향상과 국산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산재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있고, 2004년도 수입목 가격 상승에 따라 국산재 수요가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합판용, 보드용, 펄프칩용 국산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해 주는 산업용재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2002년부터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2004년도까지 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폐목재를 원료로 이용하는 보드류산업의 시설현대화도 1994년도부터 지원하여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산재의 신수요 개발 및 국산재·폐목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현재에는 「폐목질자원의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국산재의 건축부재 이용」, 「리기다소나무의 토목용, 건축용 이용」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국토면적의 45.9%, 산림면적의 58.5%를 차지하는 산촌은 농림업의 생산기반이며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촌은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으며,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이농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인구 과소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현재까지 118개 마을

을 조성하였고 45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총 193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산림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야외휴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산림경관과 임상이 좋은 산림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도시지역의 산림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였으며,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산림교육시설로 숲속수련장 조성을 추진하였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1988년 유명산,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200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96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1990년도에 『산림법』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문화·휴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운영 현황('04년말) >

(단위 : 개소)

구 분	지 정 현 황		운 영 현 황	
	개소수	면적(ha)	개소수	면적(ha)
계	204	180,253	94	118,149
국 유 휴 양 림	78	153,780	30	100,876
공 유 휴 양 림	74	19,930	48	15,521
개 인 휴 양 림	52	6,543	16	1,75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현재, 자연휴양림은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는 1995년 208만 명에서 2004년에는 48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01년도 한국갤럽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치산녹화사업 이후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21세기 산림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97년 52%에서 2001년에는 63%로 증가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재방문 의사(88%), 이용만족도(6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추이 >

(단위 : 천명)

구 분	계	'98까지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38,953	14,976	3,132	3,798	3,818	4,076	4,345	4,808
국유휴양림	8,393	3,119	646	758	863	886	1,004	1,117
공유휴양림	26,657	10,779	2,132	2,453	2,511	2,744	2,827	3,211
개인휴양림	3,903	1,078	354	587	444	446	514	480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욕장의 경우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에 오솔길, 산림체험시설,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 말까지 총 91개소가 조성·운영 중에 있다. 2005년도에는 전국 11개소에서 조성 중에 있다.

또한, 숲속수련장은 대부분 국유휴양림을 중심으로 2004년 말까지 총 19개소가 조성되었다. 숲속수련장의 주요시설은 단체숙소와 실내강의실, 야외강의장 등이다. 2005년도에는 국유자연휴양림 내에 1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2004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05년도 조성계획, 2007년까지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계획 >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4년까지 운영	2005년 운영계획	2006~2007
계	333	204	15	114
자연휴양림	140	94	3	43
산림욕장	150	91	11	48
숲속수련장	43	19	1	23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림청은 「산림휴양·문화 진흥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국민 경제력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학생 및 가족단위의 휴양, 교육문화 등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주5일 수업제 실시를 대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체험학습시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과거 운영되었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대중과 획일적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대상이 가족, 학생, 소외계층, 장애우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산림을 주제로 한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악스키·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레포츠 대회, 자연휴양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학교 운영, 숲속음

악회, 장애우를 위한 숲체험, 소나무 생태기행, 시낭송회, 숲과 문학의 만남 행사, 자연물을 소재로 한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교육문화 진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등산안내인, 숲해설가, 산악구조대 등 새로운 형태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부터 산림휴양문화포털사이트(www.san.go.kr)를 구축하여 휴양림 정보 및 서비스,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관광 및 산악레포츠 관련 정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숲체험 등의 산림교육, 그리고 각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제화 시대에 산림휴양문화를 소개하고자 영문사이트와 Mobile 시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PDA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이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연평균 20만명의 일반인과 청소년을 교육할 계획이다. 그리고 숲해설가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 대상 산림생태환경반 교육을 통해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또한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숲교육 전문기관인 녹색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숲해설 및 등산안내인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하여 산림교육·문화 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계획이다.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는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등산로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다. 전국 1,074개의 산, 2,286개 노선에 총 8,726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등산은 우리 국민의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갤럽조사(2001)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5%가 연간 1회 이상 등산을 하였고, 연간 10회 이상 등산한 사람도 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리서치에서 주5일 근무에 따른 야외생활 패턴 변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산활동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문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분별한 이용형태로 인해 전국 등산로의 약 30%가 정비가 필요할 정도로 대중적인 등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등산로 환경은 점차 악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국유림 내 등산로를 150km를 정비했으며, '06년부터는 지자체 민유림의 일반 등산로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하고 올바른 등산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사)한국산악회와 공동으로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05년에는 청소년, 일반, 공직자 등 총28개 과정 1,0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등산에 대한 이해와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매년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을 추진하고 있고 '05년도에는 7개 구간 210명이 백두대간에서 숲체험 교육 및 등산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늘어날 등산인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를 국가 등산로로 지정하여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등산로와 지역 내 등산로를 연결하는 전국 등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 상의 이정표, 위치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일정구간별로 대피소 및 야영장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2004년 7월 package(일괄대책) 합의를 통하여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기본골격에 대한 WTO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져, 후속협상을 계속하였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first approximation)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하에 후속 협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임산물 분야는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업협상에서, 목재류는 비농산물협상(NAMA)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수출·입국 간, 선·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대체로 선진국 입장은 높은 수준의 관세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관세감축에서 신축성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의 확보와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비농산물협상에서는 원목의 수출세 및 수출규제 비관세장벽(NTBs) 철폐와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합판, 섬유판, PB 등 민감품목은 flexible friends(일본, 대만)와의 공조를 통해 신축성 확보, 분야별 무세화(sectoral liberalization) 반대, 관세 감축폭 최소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 극대화에 노력할 것이다.

향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임업인의 공감대에 기반을 둔 협상을 추진하며, 대내적으로 관계부처 간, 대외적으로 일본, 대만 등 공조국가 및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 G-33(특별품목 그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임업계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다.

(2) 해외조림 확대

장기·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하여 국내 목재 수요의 50%를 충당할 계획으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에 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107천ha를 조림하였다.

그동안, 해외조림 확대를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비를 2004년까지 501억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2000년부터는 해외조림목의 수확이 시작되어 펄프용 칩 335천㎥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앞으로도, 장기 국내 목재수요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권 등과 연계한 에너지다소비 및 목재다수요 업체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의 다양화와 함께 사업의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여 해외 조림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3)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모델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30년생 이하의 가꾸어 주어야 할 나무가 약 62%로 목재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산림 보유국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 양자 간 임업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해외조림을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목재자원 확보만이 아닌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관광, 불법벌채방지, 산불 및 병해충으로부터의 산림보호 등을 의제로 임업협력을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제17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임목개량 양묘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지에 산림청 전문가를 Project Manager(총

괄책임자)로 파견한 바 있다. 또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위한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숲(해안림)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KOICA, 인니 정부, 산림청, 학계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

2005년 10월 중국과의 제5차 임업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산불, 사막화,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의 산림보호를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위원회를 통한 논의 결과로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백두산 호랑이 2마리를 기증받은 바 있다.

또한 앞으로 12월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목재 수입국인 뉴질랜드와의 제4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가질 계획이며 해외조림, 임산물 교역, 불법벌채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논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엔 산림포럼은 세계 산림에 대해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현안까지 다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나, 2005년 제5차 회의가 범세계적 목표, 법적 구속력 있는 산림협정, 재정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년도 2월 6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5차 회의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주장하고, 각료토론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의 갈등해결사례와 산림복구 지원사례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는 1994년 채택된 현 협정체제가 2006년 완료됨에 따라 후속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추가 재정 확보에 대해 열대재 소비국과 생산국 간의 견해 차가 크다.

또한 11~12월 진행되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노력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수확된 목제품에 대한 탄소흡수원 계정 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 수산업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 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자원을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9년 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1999~2002년까지 총 1,308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2004년까지 근해안강망 등 634척을 감척하였다.

2005년도 일반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선 39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EEZ 체제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2002. 12월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현해 나감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식량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는 근해어업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이 참가하는 자율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오랜 분쟁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소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유사한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및 어구·어법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실현하고, 어업인 편의도모 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수산자원회복 제고 등을 위하여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2)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을 제정, 19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4년까지 6,415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81천ha를 시설하였고, 2005년에도 50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9천ha를 시설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04년까지 90여종의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19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연간 7억마리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하고 있으며,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4년까지 651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2005년도에도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특산 종묘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할 계획

이며, 정부에서 약 9천만마리를 민간으로부터 매입하여 연안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갈 계획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라 EEZ체제에 맞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종묘방류, 바다목장화 등 어업자원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어업이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5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05년도에는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 불법어선 2,025척에 대한 매입·정리를 추진하여 지난 50여년간 고질적으로 지속되어 온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근절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어업이 잔존하고 있고, 어업허가를 받은 일부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은밀하게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어업질서 확립 기초가 전 어업분야로 확대되어 조기에 선진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제2단계로 허가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근절계획을 마련하여, 6.1일부터 강력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허가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06년도에 500여척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추가로 매입 정리하고,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위한 전업자금 지원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어업인 의식이 제고되어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여 나갈 계획이다.

(3) 친환경어선대체 및 장비설비개량

2004년에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영세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소형 노후어선, 기관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39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356톤(99척)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 소모형 저효율 기관 9,383마력(45대)과 노후된 어선 30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기계 등에 84대를 대당 200만원한도 내에서 국고로 지원하였다.

2005년도에도 영세어업인의 노후어선의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노후어선의 친환경어선대체 268톤(29억원)을, VHF무선설비(3억원), 기관대체 7천마력(9억원), 장비·설비 개량 10척(4억원), 어선용기계 공급 등 250대(4억원)를 지원중이다.

나. 해면양식어업

2005년도에는 김, 미역등 안정생산을 요하는 품목이나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어장개발의 금지와 관리가 부실한 어장의 재개발 금지 조치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김양식시설의 규모현실화 및 굴양식의 수하연 줄수등을 규정, 밀식에 의한 과잉생산 방지와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05. 3. 31)하여 양식시설시기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양식기반시설 확충분야에 2004년도 39억원 2005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소파제 시설 1개소, 개량부자 28만개 및 양식장소독제 28톤 등을 시설토록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해면양식장 개발에 2004년도 60억원에 이어 2005년도에 56억원을 투입, 변화되는 시장여건을 감안 고부가가치 중심의 갯지렁이 양식장 10개소, 키조개 양식장 1개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영세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양식장의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조성중인 양식단지조성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이나, 최근의 양식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라 일부 융자사업 및 단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산 활어 수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특별영어자금 115억원, 중간종묘매입방류 160톤(7억원) 등 총 12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종묘방류사업 확대를 위해 불교계(원로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양식어장정화 부문에 총 95억원을 투입, 부산 등 10개 시도의 양식어장 12천ha 청소, 전남 가막만, 경남 한산-거제해역, 진동만 등 특별관리어장 5천ha를 정화하였다.

양식재해예방을 위해 2005년 7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남해안 전역에 걸쳐 발생한 유해성 적조방제를 위하여 민・관・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대비 76% 수준(11억원)으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총 260억원을 양식시설 및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하여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2006년도에는 양식장 개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공급, 배합사료직불제, 해면양식시설에 총 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어장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어류양식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동시에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김・어류양식어장을 동일품종으로 재개발시 기존 면적의 5~20%를 축소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 7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 98억원은 지원 하는 등 고효율 저오염 배합사료 개발 등을 통하여 생사료 공급관행을 배합사료 위주의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양식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질병D/B구축, 이동병원 등 어병방역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과 정부의 맑은 물 공급시책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양어장 시설을 '93년부터 '04년까지 139개 양식장에 27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5년에는 7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였고, '06년에는 63억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연안국 EEZ내 어획쿼타 감축,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5년에 3,220억원(영어자금 1,150, 원양어업경영자금 2,070)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수산자원을 보유한 페루, 브라질 등과도 새로운 어업협정 또는 수산협력약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가를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통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

하여, 1998~1999년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2003년에는 꽁치 봉수망 10척, 오징어채낚기어선은 2002년~2004년 기간중 24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참치어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후 참치어선을 연차적으로 신조대체할 계획이며, 2004년에 240억원의 수산발전기금을 확보하였으나 23억원을 집행하고 85억원을 반납하였으며 132억원은 2005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2005년에는 이와 별도로 197억원의 수산발전기금을 확보하였으나 현재의 대출금리(4%)가 높아 사용을 기피하여 전액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기초생활환경 개선 ····· 207

2. 교육여건 개선 ····· 218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 220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221

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1970년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촌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의 축소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축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쇠퇴와 인구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서비스산업의 쇠퇴를 가져오며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다시 지역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1980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43%인 1,600만명이었으나, 1990년 26%로 줄어들고 2000년에는 20.3%인 938만명으로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1980년 1,083만명에서 2000년에는 403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 읍·면지역 인구 추이(1980～2000년) >

	1980년	1990년	2000년
전 국(A)	37,436,315	43,410,899	46,136,101
동 부	21,434,116	32,308,970	36,755,144
읍·면 부(B)	16,002,199	11,101,929	9,380,957
구 성 비 율(B/A)	42.7	25.6	20.3

자료 :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최근에는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시장 경제규모를 상실한 면소재지 상권의 퇴조와 함께 주거는 농촌의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은 인근 도시에서 향유하는 생활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소득향상, 주5일근무제 도입, 국민관광형태의 변화 등의 대외적 여건변화로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도시근교지역은 전원주거단지개발, 농촌관광진흥, 체험활동의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 등 농촌과 농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농촌현실 속에 기존의 식량증산과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농촌지역개발은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쾌적한 전원주거공간, 농업체험공간, 국토보전공간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다원적기능에 따른 개발수요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권이 같은 3~5개의 농촌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확충, 특성화 개발 및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0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영농권 등이 동일한 마을을 권역단위로 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게 개발유형을 설정하여 종합개발하는 상향식 지역개발방식을 지향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1,000개 권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도 사업대상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예비계획 검토, 현지조사,

사업계획설명회 등을 거쳐 2004년도 사업착수대상지 16개 권역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20개 권역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움 및 위탁방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별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과정을 거쳐 36개 권역 모두 2005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사회 각분야의 저명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3회)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초 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워크샵(324명 참석)을 실시하고, 지역개발 주체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대표 합동 워크샵(326명)과 사업권역별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2005년도에는 50개 권역에 대한 농촌지역개발 계획수립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40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와 지역전문가 등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도록 소득기반을 확충하

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성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파트너쉽(partnership)을 견지하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국 면지역중 오지·도서·무인면을 제외한 정주권개발 대상면과 광역시 자치구중 준농어촌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을 정비하고, 면지역내의 중심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마을 정비는 물론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마을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의 문화 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755개면과 15개 자치구 등 780개면(구)에 대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 199개소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향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785개 면과 15개자치구에 대하여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2단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30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면당 3~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기초생활환경정비에 30억원(국고 100%),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구당 2~3년에 걸쳐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에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에는 총예산 2,631억원(지방양여금 2,346, 지방비 5, 융자 280)을 투입하여

152개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마을내도로정비 211km, 상수도 15개소, 하수도 65km, 마을간연결도로 110km,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125개소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은 신규 7개 지구를 포함한 42개 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조성을 추진하여 2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계속시행지구 21지구는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민 및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2개소를 착수하였다.

2005년에는 총 1,946억원(국고 1,916, 지방비 29)을 투자하여 338개 면에 대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51개 지구를 추진하여 16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 농업·생활 용수개발

농림부에서는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에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 1,032천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4년까지 50호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94~'04)사업 4,751개소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부터는 소규모 자연마을(20~50호)을 중심으로 제2단계('05~'14)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4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 개발, 7,751개소의 농촌 자연마을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개발 지원할 목표로 추진중이며, '05년도에는 589억원을 투자하여 346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2003년도 행정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자연마을(20~30호 수준)에서는 아직도 불안전한 자가우물이나 자연수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도 행정조사 결과 3천여개 마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필요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

구 분	추진목표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사업량(개소)	7,751	4,751	346	2,654
사업비(억원)	12,951	7,851	589	4,511

라.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충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3년말 31.1%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 산재된 자연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부분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상수도 보급현황 >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 급 율(%)	
전 국		48,824천명	43,633	89.4	
도시	대도시(광역)	23,053	22,744	98.7	98.0
	중소도시(시)	16,431	15,946	97.0	
농촌	읍부지역	3,903	3,152	80.8	52.9
	면부지역	5,438	1,792	33.0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3)

이에 따라 제2단계(2005~2014)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이후에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자연마을(20~30호)을 대상으로 3천개소를 2014년까지 개발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생활용수를 해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589억원을 투자하여 346개소를 개발하여 34천명에 추가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6,883억원, 도서지역에 3,115억원, 총 1조 9,09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2단계 사업('05~'14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마.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행정자치부에서는 읍지역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전국 194개 소도읍에 총 12조원(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와 민자 8조)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원년인 2003년에는 인천 강화읍 등 14개읍에 962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453억, 민자등 206억)을, 2004년도에는 울산 온양읍 등 22개읍에 1,110억(국비 600억, 지방비 410억)을, 2005년도에는 부산 장안읍 등 43개읍에 1,828억(국비 437억, 지방비 1,391억)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한 바와 같이 매년 20개 소도읍에 대한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2천억원의 국비지원이 1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비 지원방식이나 규모로 보아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바.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향후 6조원 투자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1976년부터 연평균 1만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총 3조 9,780억원을 투자하여 380천동의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개량하였고, 2005년도에도 1,800억원을 지원하여 6,000동의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이후 개량할 농어촌불량주택은 134천동으로, 앞으로 건축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동당 4천만씩 융자지원을 할 경우 6조원정도 재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재원별 연도별 농어촌주택개량 투자현황 >

(단위 : 동, 백만원)

년도	사 업 량	사 업 비	융 자 지 원					보조지원 지 방 비
			소 계	재특·농특	주택기금	지 방 비	농 협	
계	380,203	3,978,029	3,941,324	930,276	1,445,446	1,061,492	504,110	36,705
'76	4,254	3,190	2,552	-	-	2,552	-	638
'77	15,238	10,289	7,251	-	-	7,251	-	3038
'78	50,000	88,000	83,000	16,600	20,750	16,600	29,050	5000
'79	35,000	100,857	96,857	24,214	19,371	24,214	29,058	4000
'80	20,000	86,105	83,520	20,880	16,704	20,880	25,056	2585
'81	10,210	58,326	57,457	14,364	11,491	14,364	17,238	869
'82	3,118	20,771	19,794	4,949	3,959	4,949	5,937	977
'83	5,087	36,822	34,957	5,244	10,487	8,739	10,487	1,865
'84	5,110	38,746	34,899	5,234	10,470	8,725	10,470	3,847
'85	7,062	52,220	48,689	5,210	26,438	7,303	9,738	3,531
'86	5,069	38,510	34,866	5,230	17,433	5,230	6,973	3,644
'87	5,052	38,055	35,056	5,258	17,529	5,258	7,011	2,999
'88	6,052	43,729	42,042	6,306	21,022	6,306	8,408	1,687
'89	5,746	40,911	40,027	5,244	24,896	5,244	4,643	884
'90	5,677	50,025	49,960	5,995	29,976	5,995	7,994	65
'91	10,112	100,903	99,933	-	59,959	19,987	19,987	970
'92	10,493	141,481	141,399	-	105,060	21,351	14,988	82
'93	11,764	159,689	159,665	-	105,099	34,600	19,966	24
'94	16,164	240,000	240,000	19,520	140,480	59,000	21,000	-
'95	25,000	400,000	400,000	124,824	115,176	120,000	40,000	-
'96	25,000	400,000	400,000	129,498	110,502	120,000	40,000	-
'97	25,000	400,000	400,000	95,398	144,620	120,000	40,000	-
'98	19,845	346,400	346,400	98,520	105,430	118,444	24,006	-
'99	10,200	204,000	204,000	97,988	44,812	40,800	20,400	-
'00	7,750	155,000	155,000	38,800	38,800	53,700	23,700	-
'01	8,500	170,000	170,000	34,000	78,000	45,000	13,000	-
'02	9,200	184,000	184,000	56,000	56,000	54,000	18,000	-
'03	9,500	190,000	190,000	57,000	57,000	57,000	21,000	-
'04	9,000	180,000	180,000	54,000	54,000	54,000	18,000	-

사.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등을 위하여 1994년7월~2004년6월말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15조원중 1조2천억원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업의 삶의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까지 10년간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농어촌도로에 3조6천억원으로 확대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지역의 교통해소는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접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추진 결과 농어촌특별세 1조3,196억원을 포함한 4조7,875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2004년12월말기준 지방도, 군도 등 상위도로의 평균 포장률은 63.1%[1]인데 비해 농어촌도로포장률이 4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주재원인 양여금법이 폐지(2004.1.29)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며,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한해 2005~2008까지만 연간 8,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 시도, 군도등에 분산투자하는등 적은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농산어촌지역의 삶의질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분야에도 농특세 재원을 지원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1994~2014) >

구분	계	'04까지	5개년('05~'09) 투자계획						'10~'14
			소계	'05	'06	'07	'08	'09	
사업비(억원)	36,000 (13,196)	13,196 (13,196)	12,000 (0)	2,400 (0)	2,400	2,400	2,400	2,400	10,804
사업량(km)	4,678	2,724	1,150	-	230	230	230	230	804

※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대한 사업비 및 사업량, ( )는 실적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촌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웰빙과 녹생공간으로서 농촌이 재조명되고 농촌의 고유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 등 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면서 농촌이 건강과 장수의 대안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순환 방법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18개소를 보급하였다. 이 화장실의 특성은 병원성의 균의 완전사멸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가 없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비화와 액비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 수자원절약, 분뇨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농작업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활기능성, 에너지 절약, 전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1~2004)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농촌다운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마을 57농가에 시범 보급하였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농가 중심으로 전통적 농촌주거문화의 유지보전, 현대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해 농촌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도배, 장판 등 주요사항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 요소 적용과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웰빙공간(생활+민박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친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농가에게는 소득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사업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70개 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전국 600지역 1,230읍면에 대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 경관, 유적지, 전통기술, 특산물 등 지역 고유의 농촌자원을 도식화,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농촌자원도를 구축하고 있다.

자.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 사업

농산어촌의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1~2004년까지 2,274개 마을에 4,878억원을 지원하여 하수관로 부설 및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2005년에도 1,900억원을 지원하여 212개 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14년까지 하수시설이 불량한 1,827개 마을에 마을당 1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1995~2014)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9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총 3,020억원을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689억원을 투자하여 93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고, 2005년에

는 51억원을 투자하여 8개소(시설개선 포함)를 추진 중이며, 공공수역이 수질보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1997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4,260억원(지방비포함)을 투자하여 39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28개소(신규13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이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04년부터 '13년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자원화시설 설치,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친환경농산물이용촉진 등의 사업에 1조 46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율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2.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은 금년(2006학년도)부터 현행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확대하였으며, 대상범위는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 및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지역이 된 고교 학생에게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1996~2005년까지 등록자 : 135,073명

- 2006학년도 선발예정자수 : 22,249명(일반대 13,554명, 전문대 8,695명)
  ·352개 대학 : 일반대 198개교, 전문대 154개교

나.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27천명에게 621억원을 1·2학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2003년까지는 학기당 200만원, 2004년도에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었으며,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균등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까지 2,637억원(201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11월 현재 25천명에 대해 637억원을 지원하였다.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지역 주민 및 학생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간 문화격차에 따른 위화감 해소 및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1995~2004년까지 71개관(379억원)을 건립 지원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2004년까지 94억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도에는 17개 도서관에 99억원의 건립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14개 도서관에 1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지방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소 감소되었다.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 연금제도는 2005년 10월말 현재 농어촌지역 가입자 수는 196만명(농어업인 35, 비농어업인 161만명)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지원액을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 2004년 7월부터는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이상(8,800~17,600원, '05년 19,800원, '06년 계획 21,600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획
212	221	293	271	399	502	605	673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노령연금 및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들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연령을 2000년부터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건강검진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세대원에 대하여 1995년부터 당뇨·고혈압·간기능 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보험급여기간을 1998년 300일에서 1999년 330일로 연장하였고,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하루에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쇼핑행위"와 남수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와 지나친 약물투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진료질서를 확립하고자 급여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의 경우에는 365일 제한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3)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율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2004년도에는 보험료 경감율을 30%, 2005년에는 40%까지 확대하였으며, 2006년에는 50%를 목표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율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5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5년 12월 일 인쇄
2005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대한민국 농림부
편 집 : 농림부 구조정책과
인 쇄 : 한 라 인 쇄
☎ (02) 503-3011

<비매품>